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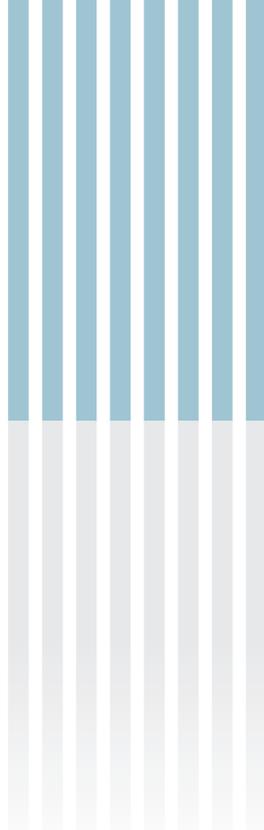
보험연구원 연차보고서

20 20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 decorative graphic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consisting of ten vertical bars. The top portion of each bar is a medium blue color, and the bottom portion is a light gray color. The bars are of varying heights and are arranged in a slightly staggered pattern.

2020

연차보고서

2021.1

『2020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2020년 보험산업은 경기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저금리 심화에 직면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개선할 모멘텀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비대면(Non face-to-face)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핵심 도전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내·외부 연구역량을 모아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그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연구자문위원회를 보험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연구분과』와 비보험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발전분과』로 나누어 연구 자문은 물론 산업 및 연구원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규 연구조직 이외에 전문 분야별 센터조직을 통해 시장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일반 소비자 및 예비 보험인과 소통하기 위한 짚막한 영상 자료를 『보험연구원 Report』라는 이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험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기존의 『CEO Report』 발간을 활성화하고 『CEO Brief』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리뷰』와 『보험법리뷰』를 발간하고 각종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보험연구의 외연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험 학계 및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보험연구센터』를 개설한 이후 「산학세미나」를 매월 개최함은 물론 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학계의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용역 등의 형태로 다양한 보험연구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험연구원은 2020년의 연구활동 및 대외활동을 모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I 장은 2020년의 계획 및 위·수탁과제, 『CEO Report』, 『CEO Brief』, 『KIRI 리포트』, 『고령화리뷰』, 『보험법리뷰』, 『KIRI 영상자료』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II 장은 2020년의 연구성과를 제시한 정책·경영세미나, 산학세미나, 포럼 그리고 학술활동 등의 대외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III 장은 사업재조정, 위기대응력 강화, 위험선별·인수능력 강화, 판매채널 선진화, 공·사 협력모형, 소비자 신뢰 제고의 6대 연구 목표를 담은 2021년 연구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IV 장은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이 시장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쪼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보험연구원장

안철경



CONTENTS

I

2020년 연구 활동

Chapter 01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4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6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Chapter 02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 8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9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10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11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12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13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행위 판단 기준

Chapter 03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 16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17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 방안
- 18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 19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20 자산운용 한도규제 및 평가방법 해외사례

Chapter 04

보험상품 혁신 및 제도 개선

- 22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 23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 25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26 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안정화 방향

Chapter 05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 28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 29 사회적 신뢰와 보험

- 30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31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 32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사례

Chapter 0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34 소비자 친화적 금융상품설명서 개편 관련 연구
- 35 실손의료보험 종합제도 개선 방안
- 36 풍수해보험 실효성 강화 및 운영개선
- 37 2020년 보험업 경쟁도 평가
- 38 스몰라이센스 도입 및 부수/겸영/업무위탁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 방안 연구
- 39 무인비행장치(드론)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Chapter 07

금융·보험 이슈 연구

CEO Report | CEO Brief

- 42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 42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 42 2020년도 세계 보험산업 전망
- 42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 43 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 43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43 코로나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44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과 주요 내용
- 44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45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45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 45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46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 4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 4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 4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I) - 소비자 중심 경영
- 48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 48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V) - 보험상품·채널

CONTENTS

- 49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 49 코로나19와 개인보험시장 동향
- 50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KIRI 리포트

- 51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평가와 시사점
- 5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52 우리나라 혼인율 급락의 구조적 특징
- 52 계약이전 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검토
- 53 기업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모형 검토
- 53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 54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 부담에 대한 논의
- 54 기후위험 공시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와 시사점
- 55 가계부채 저량(Stock)의 시대 도래와 시사점
- 55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보험산업 대응
- 56 최근 국제 혼인 증가의 특징
- 56 영국의 민원대행업 규제개혁과 시사점
- 57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 마이너스 실질금리 장기화
- 57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파산과 생존
- 58 최근 소비 감소의 가구 유형별 특징
- 58 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 59 코로나19로 인한 개인보험 소비자 수요 변화: 인터넷 검색량 분석
- 59 공공의료기관의 적정 진료와 비급여진료비 관리
- 60 투자 부진 장기화와 잠재성장률
- 60 코로나19와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 61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향
- 61 설계사 인력특성과 관리 필요성
- 62 설계사 정착률 현황과 보험회사의 과제
- 62 설계사 소득양극화 현상과 향후 과제
- 63 미국 비은행 SIFI 규제의 개정과 시사점
- 63 국제 비교를 통한 보험산업의 중·장기 성장성 평가
- 64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
- 64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 65 기업 경영 및 환경 평가의 중·장기 변화: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의 설문 중심으로

- 66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
- 66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
- 66 흡연 행태 변화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 66 Solvency II 경과조치 개정논의와 시사점
- 67 호주의 금융기관 경영자 보상에 대한 규정 개정과 시사점
- 67 세대별 노인 문제의 심각성 비교
- 67 감염병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
- 67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68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시사점
- 68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 68 행사취소보험 시장 현황과 과제
- 68 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
- 69 제로금리시대와 변액보험 보증 위험 관리
- 69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피해의 증가와 시사점
- 69 호주 환급세액의 연금재원 활용과 함의
- 69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 70 코로나19로 인한 장단기 사망률 변동성 확대
- 70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상승 현상과 시사점
- 70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감독이슈
- 70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1 소매 판매의 회복세와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
- 71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험산업 장기투자 활성화 과제
- 71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 71 생명보험회사 파산과 경영 리더십
- 72 최근 기부 및 자발적 상호부조의 변화
- 72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 72 언택트 시대의 보험영업규제
- 72 일본, 대만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 73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점
- 73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 73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
- 73 보험소비자 반복가입 행태 분석
- 74 전자서명법 개정과 보험회사의 CM 채널 활성화
- 74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CONTENTS

KIRI 고령화리뷰

- 75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 75 결혼, 출산, 다자녀 기피 현상이 출생아 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
- 76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빈곤과 시사점
- 76 IRP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평가 및 과제
- 77 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 78 보험/연금의 연계상품 해외사례와 시사점
- 78 비전형(Non-standard)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연금정책과 함의
- 78 인구 고령화와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
- 78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
- 79 코로나19 이후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 확대와 대응방향
- 79 일본 2020 공·사 연금제도 개혁과 함의
- 79 일본 치매보험시장 현황 및 의의
- 79 정보제공을 통한 퇴직연금 가입자 행동변화 유도
- 80 호주의 퇴직연금 인출상품 재정비 현황
- 80 일본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과 시사점

KIRI 보험법리뷰

- 81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
- 81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I)
- 82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 82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 83 금융상품의 분류와 보험 관련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 83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Whiplash Reform)의 내용 및 시사점
- 84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대한 모집 규제 적용 여부 검토
- 84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 85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 86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 시 고려사항
- 86 전속 보험판매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미국연방항소법원 최신 판례 분석
- 86 암 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분쟁사례
- 86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 87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에 대한 약관 해석 및 개선
- 87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87 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 87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KIRI 영상자료

- 88 고령화와 주요국의 인구정책
- 88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 88 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 88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89 코로나 이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 89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유형(1)
- 89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유형(2)
- 89 보험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90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제도 간소화의 필요성
- 90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 규제 변화(1)
- 90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 규제 변화(2)
- 90 기후위기와 보험산업의 리스크(1)
- 91 기후위기와 보험산업의 리스크(2)

II 2020년 대외활동

Chapter 01

정책·경영세미나

- 96 금융소비자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 97 데이터 3법과 보험산업 - 보험정책 섹션
- 98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의 변화
- 99 팬데믹 시대 보험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 101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102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 103 보험산업 경쟁력 혁신 방안
- 104 파라메트릭 보험의 상품화 방안
- 105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 106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Chapter 02

산학세미나

- 108 보험회사 CEO 보수체계
- 108 코로나19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대응

CONTENTS

- 109 POST-코로나 시대, 보험소비자 보호
- 109 공동재보험 및 보험증권화를 통한 신제도 연착륙 방안
- 110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 110 정보유출위험 가능최대손실 추정
- 111 보험회사 추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 111 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
- 112 금융기관의 기업위험관리와 임원보상
- 112 신용생명보험 발전방안

Chapter 03

포럼

- 11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현황과 과제
- 114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 115 노후준비는 절약보다 전략이다.
- 116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및 암보험 분쟁사례
- 116 온라인 광고와 모집에 관한 소고
- 117 부당승환금지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제언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120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121 작업반/회의 참여
- 121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 122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III

2021년 주요 연구계획

1. 사업재조정

- 124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124 계약이전 인프라 Run-off 시장 조사 - 독일 사례

2. 위기대응력 강화

- 125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 125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 125 디지털 전환과 운영위험 관리
- 125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3. 위험선별/인수능력 강화

- 126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상품 대응방안
- 126 재보험산업 발전 정책방향
- 126 미·일 개인연금 현황과 시사점
- 127 자동차보험 국제 비교
- 127 Mobility as a Service와 보험제도

4. 판매채널 선진화

- 128 디지털 전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연구
- 128 기업성보험의 비대면채널 활용 방안 연구 - 호주 사례

5. 공·사 협력모형

- 129 건강보장체계에 대한 연구
- 129 재난보험시장 공·사 협력모형 연구
- 129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129 보험회사 장기대체투자 현황과 과제

6. 소비자 신뢰 제고

- 130 보험소비자 행태 조사
- 130 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 행태 분석
- 130 보험업 관련 주요 규제 체계 정리 -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131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 131 분쟁 발생 시 약관해석 기준에 대한 연구

IV

2020년 일반현황

- 134 경영비전
- 134 연혁
- 135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136 임직원 현황

2020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 이슈보고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

|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 KIRI 영상자료

보험산업 관련 주요 이슈의 핵심 내용을 짧은 동영상 콘텐츠로 제시

|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 CEO Report 및 CEO Brief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 포커스·이슈 분석

웹 격주간지 『KIRI 리포트』·웹 계간지 『KIRI 고령화리뷰』·웹 격월간지 『KIRI 보험법리뷰』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I

2020년 연구 활동

- Chapter 01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Chapter 02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 Chapter 03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 Chapter 04 보험상품 혁신 및 제도 개선
- Chapter 05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 Chapter 0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Chapter 07 금융·보험 이슈 연구

2020년 계획과제 관련 보고서는 발간 및 심사의뢰 완료된 보고서입니다.

Chapter 01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보고서

연구 배경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다양한 경제환경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앞으로의 경제성장 경로를 예측하는 데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다양한 경제환경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앞으로의 경제성장 경로를 예측하는 데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는 여전하며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여건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4차 산업의 부상은 보험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이었으나, 2021년 보험산업(퇴직연금 제외)은 코로나19 관련 정책 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 등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가 전망된다.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이었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지 의문이며, 수익성 악화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동성 확대가 단기 저축수요 이상의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고성장은 지속성이 낮아 보인다.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보험산업(퇴직연금 제외)은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 등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가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보험산업의 고성장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은 2020년 2.5%에서 2021년 -0.4%로 역성장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2020년 6.1%에서 2021년 4.0%로 성장성 둔화가 전망된다.

생명보험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4% 감소할 전망이다. 사망보험은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지속,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제한적 회복으로 보험료가 고가인 종신보험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2.6% 감소할 전망이다. 연금보험은 2021년에도 연금보험 시장 수요·공급 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보험은 단기 유동성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역마진 확대 우려로 추가적인 규모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의 소폭 감소가 전망된다. 변액저축성보험은 2021년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으로 초회보험료 증가가 기대되나,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감소로 수입보험료는 6.0%의 감소가 전망된다.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투자 선호에 따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6% 증가가 전망된다.

손해보험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 성장세는 8.0%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질병·상해보험은 보장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갱신보험료 증가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21.3% 감소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 효과 소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1년부터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일반보험은 보증·해상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5.1%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회복 지연으로 1.2% 성장이 전망된다. 해상보험은 위성보험의 기저효과, 수출입 물동량 감소, 조선수주 감소 등으로 2.3% 감소가 전망된다.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확대, 농산물재해보험, 휴대폰보험 등 신규 담보 확대로 6.9% 성장이 전망된다.

과제

보험산업은 코로나 경제와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은 코로나 경제와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보장과 고령사회의 건강과 소득 보장 공급자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과 공정경쟁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고 선제적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7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양천구의 거품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16년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4년부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가능성에 대해서 KOSIS 자료를 이용하여 25개 구 단위별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거품은 기대심리에 의해 비합리적인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거품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즉, 가격이 비합리적인지(과대분산 기준), 비합리적인 가격이 2019년 10월 현재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장기성 기준), 동 기간 중 기대심리에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는지(변동성 기준)를 거품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5개 구별로 아파트 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2019년 10월 현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7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양천구의 거품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대분산 기준으로 거품이 가장 먼저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은 강남구와 용산구(2017년 4월)이며, 이후 거품은 서초구, 송파구 및 양천구(2017년 6월), 영등포구(2017년 7월), 강동구(2017년 9월) 등으로 확산(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의 경우 2017년 9월)되어 갔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8. 2 대책과 9. 13 대책은 시기 측면에서 크게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거품으로 나타난 18개 구의 경우 12. 16 대책에서 확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지역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같은 방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년 4개월간이었고, 강남구의 경우 2005년 11월 이전부터 2009년 2월까지였다.

Chapter 02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행위 판단기준 -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 보상체계 중심으로

정성희(연구위원)·황현아(연구위원)·홍민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의료시스템이 공공부분 중심인 국가의 경우 의료배상책임은 주로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용기금을 통해 배상되는 반면, 민영의료시스템 국가에서는 의료배상책임에 있어 민영보험시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사례는 의료배상책임의 법체계, 보상제도(보험, 공제, 기금 등), 의료배상책임 보험시장의 공급자 특성 등에 따라 구분된다.

최근 의료사고 발생과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어 왔다. 이에 의료배상책임의 피해자 구제제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주장들을 주요 쟁점별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실책임 원칙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사고 피해 보상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생존과 직결된 신체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종사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보험(공제) 가입은 낮은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하여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와 관련한 국내 주요 쟁점으로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강화가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만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송윤아(연구위원)·홍민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1977년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하여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 및 손해사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행사 증가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으로 인해 향후 독립·위탁손해사정시장 모두 커지고, 위탁시장의 수요과점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사정 위탁 규모는 2018년 기준 1조 1,328억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8.5%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조사비는 2018년 기준 약 2조 943억 원으로,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7.1% 증가하였다.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규제의 규범력 미흡, ② 법규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성 부족, ③ 독립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④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⑤ 위탁손해사정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⑥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위탁·독립 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활성화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교섭력 제고, 손해사정업무 표준위탁기준 개선 및 공시, 보험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및 제재, 표준 위탁수수료 협의 및 공표제 도입, 손해사정 전담심의기구 등을 제안하였다.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양승현(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이나, 근로자와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최근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및 노조가입 허용 등 법적 지위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논의는 보험설계사의 보호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험판매의 큰 축인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내지 관련 규제의 변화는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상 지위 다툼과 관련된 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 관련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론 현황과 쟁점을 정리하고, 그 의미와 상호관련성 등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설계사 관련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노동법상 지위 관련 분쟁의 핵심은 다투어지는 개별 사안에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의 일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가 노동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형식을 남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른바 위장자영업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업무시간, 장소 및 방법에 있어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용종속성이 없다고 보아 대부분 근로자성을 부인해왔으나, 통신판매등 일부 유형의 보험설계사 건에서는 이를 인정한 사례가 일부 발견된다.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 방식과 특성은 동태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보험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보다 세밀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 현안사항인 고용보험 개정안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포섭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각 법률별로 쟁점과 산업에 미칠 파장은 서로 다르다.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입법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계약 및 업무수행 형태를 몽둥그려 통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일반화된 논의가 아니라, 다른 직역과 구분되는 ‘보험설계사’ 직역의 특수성, 즉,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김동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향후 경쟁력 있는 GA채널 구축을 위해서는 본사의 고능률 모집인력 활용, 합리적 판매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모회사에 대한 충성도 제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판매상품 및 고객 차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험시장 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속 영업조직이 취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자회사형 GA의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GA채널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영업망 구축 또한 쉽지 않아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금까지 자회사형 GA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거나 판매채널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모회사 소속 고능률 전속설계사의 상당수를 자회사에 배치시킨 일종의 분사전략을 취한 경우이다. 끝으로 타 사와는 차별화된 자사 상품을 기초로 일정 수익을 확보한 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사례이다.

자회사형 GA 운영에 대한 검토는 각 사가 보유한 전속설계사 운영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대규모 전속 판매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비용절감 또는 인력관리 수단으로 자회사형 GA의 활용 검토가 가능하다. 한편, 모회사에 생산성을 갖춘 일정 수준 이상의 모집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모회사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자사의 모집조직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채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사가 강점을 보유한 상품 또는 향후 사업운영 계획에 부합한 모집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단기주의 관점에서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개선할 목적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기보다는, 자사의 상품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장래이익이 높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모집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조용운(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이아름(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가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하여 자문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보험계약자의 공정성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 발달하여 소비자 보호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있어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요 내용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용되는 의료자문방식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매우 다르다.

첫째,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있다. 미국은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의료자문을 각 보험회사가 각각 수행하고 있어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가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하여 자문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는 제3의료기관을 이용한 자율조정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순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조정과 분쟁조정을 통합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전후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정소송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의 결정 이후에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줄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우리나라는 제3의료기관 목록은 공시하고 있지만 의료자문자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의료자문자의 정보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는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행위 판단기준

양승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기술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판매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현행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는 추상적으로만 정의되어 온라인상의 행위가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보험마케팅의 발전과 확산이 예견되는 가운데 그 규제적 취급이 문제되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 모집행위’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무엇보다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에그리게이터 등 비교사이트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 최근 비교사이트 등 인터넷 보험마케팅을 규제대상인 보험 판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반면, 미·일은 보험 판매의 개념 정의상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되 하위법령이나 행정해석 등으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행위’를 별도 규제하는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EU보다 미·일 방식을 참고하여 입법이나 해석 또는 지침을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본다.

우리 법원의 모집행위 판단원칙 및 보험상품의 광고행위 및 비교·공시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체계 정합성에 대한 고려하에, 그간의 금융감독당국의 해석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면,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행위’ 성립 여부는 ① 특정 보험상품을 전제로 한 설명, 권유 등 특정하고 구체적인 행위로서, ②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행위의 존재가 존재할 것, ③ 대상 행위가 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련의 흐름상 행위자가 모집 권한 내지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할 것을 판단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나아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모집행위는 아니나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행위는 별도 범주로 규제하고, ② 보험상품의 비교·공시행위 등 모집 유사 행위는 소비자에게 행위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③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비교·공시’ 관련 준수사항을 보다 세밀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Chapter 03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 방안 -
-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
-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 자산운용 한도규제 및 평가방법 해외사례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김세중(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퇴직연금 편중 회사의 경우 자본확충을 비롯하여 보험상품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퇴직연금 자산관리를 통한 요구자본 부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중 금리연동형 퇴직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및 신탁사업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해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반영된다. 2005년 RBC제도에서 퇴직연금은 운영리스크만 산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예상과 달리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으로 구성되면서 퇴직연금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말 생명보험이 43.2조 원, 손해보험이 11.6조 원이며, 타 업권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고 이율도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운용에 내재된 리스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각각 99.1%, 99.5%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중 금리확정형 비중은 각각 45.2%, 99.3%로 나타난다. 신용 및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은 퇴직연금 자산 비중이 높은 3개 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약 5%, 약 7%의 증가가 예상된다.

대응 방안은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의 영향이 큰 보험회사에 주로 해당되었지만 그 외의 보험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편중 회사의 경우 자본확충을 비롯하여 보험상품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퇴직연금 자산관리를 통한 요구자본 부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중 금리연동형 퇴직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및 신탁사업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퇴직연금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 증가가 불가피하며,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부담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요구자본의 도입은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부담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제도변화를 시작으로 보험업권 퇴직연금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 방안

황인창(연구위원)·김해식(연구위원)·이승준(연구위원)·김동겸(연구위원)·안소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동일한 적용에서 개별 회사의 금융시장 영향력과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 부실 시 행정부 주도의 도산처리, 정리기금 중심(보호기금 보조)의 재원조달로 개선하고,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 부실 시 절차적 정당성 및 시장 규율을 제고하는 도산처리, 보호기금을 통한 재원조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통합체제하에서의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경직성으로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및 소비자 분화, 금융회사의 대형화·점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회사 파산 시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한 보험계약 조건변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도산처리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권역별로 기금을 분리하여 권역별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기금의 관리기구 자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계정을 금융권역 또는 개별회사 중심으로 사전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보호한도를 차별화하고, 유가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현행 통합 예금보험체제에서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금의 과다적립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과소적립에 따른 효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수준 또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연간보험료 한도를 설정하거나 사후각출을 혼합하는 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김석영(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경제상황이 저성장으로 전환되고 보험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보유계약 포트폴리오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보험회사의 경영 차원에서 잔존계약 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잔존계약 거래의 개념과 잔존계약 거래 유형 그리고 잔존계약 거래 시장 및 거래 사례를 소개하여 잔존계약 거래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내 잔존계약 거래 시장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핵심 분야 집중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트폴리오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 역시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는 2009년 1,960억 유로에서 2017년 2,75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런오프 거래 증가, 원수보험회사의 런오프 거래 매수, 사모펀드의 등장 등이 런오프 거래 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계약이전이 감독당국의 인가에 의해 이루어져 이의성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계약자도 계약이전에 따라야 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이의신청이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계약이전 제도는 집단적 보험계약자 이익보호를 지향하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보험계약자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최근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전문보험회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계약이전 관련 규정,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진입, 계약자 보호 문제 등으로 계약이전을 경영효율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회사별 특징을 살린 전문보험회사로 탈바꿈하고 효율적 경영을 하는 데 런오프 거래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파산 교훈으로 일본 생명보험 산업은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는 생명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위험을 차익 확보와 ALM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자산 거품 붕괴로 들어난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파산한 7개 일본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사례를 정리하는 한편,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생존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중 타이요(太陽)생명, 다이도(大同)생명, 후코쿠(富國)생명 사례도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주요 내용

일본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자산 거품 붕괴 등의 영향으로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였다.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자유화, 국제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에 저축기능 강화 및 주식투자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요구하였고,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망보험시장 포화와 만성적인 비차손 상황을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으로 타개하려고 하였다.

둘째,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배당 및 이자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주식, 부동산 관련 대출, 해외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선물환, 구조화채권 등 고위험 투자를 더욱 늘렸고 손실만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이러한 경영에 대해 대내외 감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도 생명보험산업을 은행처럼 취급하여 부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당해 연도의 손익과 대출의 부실 여부만을 검사하는 등 보험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파산 교훈으로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운용 한도규제 및 평가방법 해외사례

이승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우리나라 자산운용 규제의 개선방향으로 규제 변화와 일관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시가평가를 통한 집중위험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유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주주 규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보험업법의 이사회 의결요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

IFRS17과 K-ICS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목적 및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산운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보험계약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운용 한도규제와 이에 따른 주식 및 채권의 평가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특정 자산보유의 한도와 평가 방식, 특히 주식 보유에 따른 취득원가와 시가평가 방식을 중심으로 해외의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를 살펴보았다. 미국, 일본, 독일과 EU, 영국, 호주 등의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자산운용 규제방식을 크게 특정 자산의 비율 또는 한도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직접규제와 지급여력규제를 통하여 특정 자산의 집중위험을 통제하는 간접규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우리나라 자산운용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자산운용 규제의 목적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여 자본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보험사고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장을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는 지급여력 규제와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 자산운용 규제의 개선방향으로 K-ICS와 IFRS17 도입에 따른 규제의 변화와 일관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시가평가를 통한 집중위험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유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주주 규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보험업법의 이사회 의결요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

Chapter 04

보험상품 혁신 및 제도 개선

-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
-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
-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 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안정화 방향 -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고,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제도 개선의 효과와 부작용을 예상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 주요국 제도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책임법제와 자동차보험제도는 해외 주요국의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이에 주요국 자동차보험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 제도의 변화 방향을 예측·설정하고, 또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의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시스템은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책임법제는 피해자 구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보험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한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법제가 먼저 형성되고 그 책임법제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보험제도가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사고에 대한 준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연혁적으로도 자동차사고 관련 책임법이 먼저 제정되고 보험가입 의무화는 그 후에 이루어진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보통법상의 책임원칙인 과실책임원칙과 대위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영국의 경우 판례에 의해, 미국의 경우 개별 주(州)의 입법 및 판례에 의해 실제 대륙법계의 준무과실책임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편이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존재가 책임법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체계에 따라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i) '운행'의 '지배'와 '이익'의 주체에 대한 책임 부과, (ii) 대인사고에 대한 강화된 보상, (iii) 선보상-후구상 원칙에 따른 신속한 보상의 기본원리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된 현안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 해외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용식(연구위원)·양승현(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경상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보장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개선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 그리고 대인배상 II 과실상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경미사고 증가로 교통사고 부상환자들 가운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대인배상 사례와 민원 현황을 분석하고, 선형연구와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경상환자 보상 제도 개선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합의금(혹은 위자료),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배상 민원 분석 결과,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상절차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호소만으로 원하는 치료를 기한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과 일본은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계획서, 합의 시 상해 회복 여부 확인 등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사고책임에 부합하는 보상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상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기준을 강화하며 경상환자 보상기준을 강화하였고, 캐나다는 경상환자 치료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였다.

경상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보장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개선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 그리고 대인배상 II 과실상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상해 유형과 중증도(심도) 정보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지급보증기간에 부합하는 지급보증 금액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 제정과 대인배상 II 과실상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교수) | 보고서

연구 배경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하여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서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상으로 적립방식에서의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민영보험과 협력하여 동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인 노령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하여 노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로써 시행 13년 만에 서비스 공급상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잘 정착되어 치매·중풍 등으로 힘들었던 노인과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이 2008년 4,585억 원에서 2019년 7조 8,127억 원으로 연평균 29.4%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누적 적립금도 감소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적신회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동 보험의 재정수지 및 보험료 부담의 변화를 전망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 원에서 2030년에는 94만 원, 2050년에는 650만 원, 2065년에는 1,699만 원으로 인상되어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여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 개편은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서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상으로 적립방식에서의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료 차등제 도입 목적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보험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의 효과도 크다. 또한 가입자의 행동이 보험계약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도 도모가 가능하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지속가능성 위협요인을 살펴보고, 제도의 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건강보장 지속을 위한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큰 특성으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다. 특히 몇몇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보장해 주는 포괄보장구조로 인해,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가입자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되기 쉽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①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②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③ 자기부담금 상향, ④ 재가입주기 단축 등의 상품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급여·비급여의 포괄보장구조는 의료 특성을 감안하여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부담률 상향과 비급여 통원의 최소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공·사 건강보험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사 모두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통의 이해관계하에서 힘을 모아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안정화 방향

기승도(수석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2000년 자동차보험 자유화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금원가지수 공표제 도입', '임의담보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 추구', '상시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손해율 안정화제도 정착', '보험금원가지수 공표와 보험금누수 방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설립' 등을 통해 자유화제도의 보안이 필요해 보인다.

2000년부터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본격 시작되었다. 자유화 이후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자유화 이후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과 그 갈등을 해소해왔던 여러 행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2000년 자유화의 시작과 더불어 보험회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사회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즉, 보험금 원가 상승 등의 상승으로 손해율이 올라가는데, 사회여론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① 주기적으로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②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인수거절 증가)로 소비자 불만 증가, ③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축소로 사회적 후생 축소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현 자유화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의 두 가지 특성, 즉 의무보험과 일반보험이라는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금원가지수 공표제 도입', '임의담보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 추구', '상시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손해율 안정화제도 정착', '보험금원가지수 공표와 보험금누수 방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일명 '보험금원가평가위원회 설립')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Chapter 05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
- 사회적 신뢰와 보험 -
-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사례 -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한상용(연구위원)·문해정(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최근 저금리의 장기화와 새로운 회계 및 IFRS17 및 K-ICS와 같은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손익 관점에서 가치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의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역량과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보상체계의 설계는 보험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경제적·규제적 환경의 변화는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수익성과 가치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과 수익성 및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가치경영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는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보상보다는 고정보수의 비중이 높아 보상과 기업의 성과 간의 연계성이 낮으며, 경영자 보수의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사용한 주식기반의 성과연동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영자에게 중·장기적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절히 제공해 왔다. 또한 경영자 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중시하고 보상의 결정에 있어 주주참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자 보상에 대한 주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왔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들이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주식기반의 성과연동 보상과 성과급에서 이연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증가시키고, 중·장기적 기업가치의 향상을 목표로 설계된 경영자 보상체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인 CEO의 장기적 책임 기회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경영자 보수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회사들이 보수의 구체적 결정정책과 산정기준 및 공식, 보수의 축소 및 환수에 대한 규정 등을 공시하도록 해야 하며 경영자 보수의 결정에 대한 주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신뢰와 보험

성영애(인천대학교 교수)·김민정(충북대학교 교수) | 보고서

연구 배경

사회적 신뢰는 보험신뢰와 정적인 관계이고,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는 보험가입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신뢰수준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재적 관점과 공공재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신뢰란, 같은 사회에 소속된 상대방이 규범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협동적으로 행동하며 선의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외자료와 국내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수준을 평가하고, 그리고 보험신뢰도와 보험소비자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2017~2020년 WVS 자료를 이용하여 16개국(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신뢰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순위로 보면 7~10위에 속하고, 평균으로 보면 전체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16개국 중 7위이고,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8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10위, 기관신뢰수준은 7위이다. 통상 사회적 신뢰라고 보는 일반적 신뢰수준과 기관신뢰수준을 놓고 보면 사회적 신뢰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실시한 국내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는 보험 보유 여부, 보험 보유 개수, 적정수준의 보험가입행동 등의 보험가입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신뢰수준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재적 관점과 공공재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신뢰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유형을 고려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신뢰도가 낮은 보험회사 직원·설계사의 역량 강화와 소비지지향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보험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수준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적 환경 등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피해 등 보험과 관련된 개인 경험과 이러한 경험의 사회적 공유로 인하여 신뢰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신뢰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강성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특히 IT·교통·통신, 의료·보건 등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보험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고령화, 저성장 과정에서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혹은 감소 효과 및 원인을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험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성, 시혜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충격 이후엔 장기적이고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으며, 취업·고용 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의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T·교통·통신, 의료·보건 등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즉,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4.9명, 일반금융 5.6명, 금융보조 7.3명인 데 반해 보험산업은 14.8명으로 보험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높았다. 또한 보험산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9.9명)를 산업별로 보면 비금융 서비스 5.85명, 금융보조서비스 2.94명, 제조업 0.64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산업에 비해 보험산업이 유관 산업의 고용을 유발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보험산업의 특징 중 산업 간 강한 연계성과 관련되며, 이러한 특징은 타 산업의 일자리를 유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보험산업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슈어테크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등 보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장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일본 상위 6개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특징은 해외시장 다변화, 대형사 중심에서 중견사로 확산, 합작투자회 회사 인수 추진, 호주 및 미국 시장에서 과감한 투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사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장 다변화와 효과적인 현지화 전략 추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아시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초보적 수준이다. 이에 국내 보험산업과 가장 유사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성공 사례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생명보험회사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한 일본은 종전의 아시아 신흥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결과, 현재 일본은 6개 생명보험회사가 13개 국가에서 약 50개 이상 금융·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출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 보험회사 수는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회사 모두 해외 자회사의 성장 속도가 국내보다 빠르고, 특히,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 수입보험료와 순이익 비중이 각각 18%, 12.6%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층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외시장 편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진출 시 신흥시장의 경우 지분 출자 또는 합작투자 방식, 선진국 시장은 인수·합병 등 단독투자 방식의 진출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신설보다는 합작투자 또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개선 등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사례

이상우(수석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역할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치매 보장 강화와 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인구고령화와 포용국가 추진, 4차 산업 발전에 따라 위험관리기관으로서 역할 변화와 새로운 기회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포용력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 보험산업의 역할 분담 확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역할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주요 배경은 인구사회 변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포용사회와 성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 확대와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와 장기이식 의료비 보장, 아동 보육 지원, 부모 간병비용 보장 등을 제공하여 기부 문화 촉진과 일·육아·간병 양립 문제 개선 등의 사회 문제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상품과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하고, 고령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가족 대행 유료 서비스와 보험금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고령층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와 토탈형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증진형보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치매 보장 강화와 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금융노년학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개발과 고령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대학 등의 기초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질병 예방·조기발견과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일본 사례와 G20 기준 등을 참고하여 포용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혁신적 포용 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 역할 분담 제고를 통한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hapter 0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소비자 친화적 금융상품설명서 개편 관련 연구 -
- 실손의료보험 종합제도 개선 방안 -
- 풍수해보험 실효성 강화 및 운영개선 -
- 2020년 보험업 경쟁도 평가 -
- 스몰라이센스 도입 및 부수/겸영/업무위탁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 방안 연구 -
- 무인비행장치(드론)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소비자 친화적 금융상품설명서 개편 관련 연구

변혜원(연구위원)·백영화(연구위원)·이규성(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행태경제학적 접근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태경제학적 특성을 진단·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수단을 고안하며, 사전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입된 정책수단은 도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단기·장기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설명서나 약관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금융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행태과학의 통찰(BI: Behavioral Insights)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정보 전달의 효과를 개선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국내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행태경제학에 기초한 정보공시 개선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호주에서는 소비자의 정보과부하와 제한적 주의집중 특성을 고려한 퇴직연금 대시보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단기대출자 대상 실험은 터널링 효과, 인지과부하, 부각효과를 바탕으로 대출 시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을 부각시켜 대출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단순화와 부각효과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정보습득 의지를 높이고, 신용카드의 주요 특성에 대한 이해력을 개선하였다. 다른 실험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과부하, 과신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보전달방식 개선과 정보가용성을 높여 합리적 신용카드 선택 비율을 높였다. 한편 단순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연금정보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선택과부하, 현상유지 편향을 경감시킨 사례도 검토하였다. 이 밖에도 제한된 주의집중과 인지과부하를 고려한 EU의 PRIIPs 핵심정보자료 사례, 영국 FCA의 보험갱신 시 상품비교 독려 실험, 미국 레모네이드의 상품설명서 개선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행태경제학적 접근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다. 먼저 정보에 기초한 금융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현상의 바탕이 되는 근본원인과 소비자의 행태경제학적 특성을 진단하고 분석해야 한다. 둘째, 현황·문제 분석과 행태경제학에 기초한 정책수단을 고안하고, 사전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도입된 정책수단은 도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단기·장기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끝으로 행태경제학적 접근은 기존 소비자정책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종합제도 개선 방안

정성희(연구위원)·노건엽(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이 도덕적 해이 유발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본인부담금은 개인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급여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장의 사적 사회안전망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입자의 건강보장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먼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 관리를 위해서 가입자의 비급여의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입자의 행동이 보험계약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 도모도 가능하다.

둘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서는 포괄 보장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보장구조도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손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가입자 부담 확대 완화, 도덕적 해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의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 진료 및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통상 4~5년)에 따라 보완형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15년을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및 비급여의료비 관리 방안으로 금융위·복지부 주관의 「실손의료보험·비급여의료비 보장 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 및 비급여 현황 데이터의 집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급여의 수가·진료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비급여 심사·자문기구 구축·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풍수해보험 실효성 강화 및 운영개선

송윤아(연구위원)·이기형(연구위원)·문해정(연구위원)·홍민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상대적으로 풍수해위험이 높은 일반가입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일반가입자에 한해 실효성이 높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보험료 지원이 저위험 경제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제공한다.

풍수해보험은 저조한 보험가입률 등을 들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제도와와의 관계 정립 등 풍수해보험제도의 장기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풍수해보험제도가 당면한 주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분석 결과, 풍수해보험제도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일반가입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일반가입자에 한해 실효성이 높으나, 주택의 경우 보험료 지원이 저위험 경제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84.2%가 경제취약계층으로, 풍수해보험을 지원한 국고의 36.1%가 경제취약계층을 위하여 지급되었으며, 경제취약계층의 손해율(8.1%)은 일반가입자(47.2%)의 1/5에도 못 미친다. 또한 보험가입 실적과 ① 침수흔적도, ② 풍수해보험금 수령실적, ③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적 등과의 관계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풍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보험가입률, 또는 풍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온실이 풍수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저위험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제도 간 정합성 부족, 그리고 풍수해보험 운영방식의 합목적성 부족이 풍수해보험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간 보충적 관계 제도화와 재난취약지구 중심 풍수해보험운영 제도화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담보위험(기업휴지, 화재) 확대와 장기계약 도입 등 실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품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 보험업 경쟁도 평가

임준(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한상용(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안소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생명보험시장은 시장구조 지표와 시장성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세분화하여 시장을 확정하였는데, 일반손해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하였다.

금융업은 그간 진입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됨에 따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인 업권별 경쟁도 평가는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어 2018년에 이어 2020년에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2020년 3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4개사가 영업 중이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집중도(HHI)는 2019년 1,037이다. 생명보험회사 영업이익률은 2019년 2.70%로 2017년 3.60%를 제외하고 매년 3.0%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전체 평균 사업비율은 2000년 초반 이후 감소하여 1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6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18.4%를 기록하여 경쟁이 가열됨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종목별, 채널별 시장경쟁에서 시장집중도가 높게 나타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종목 및 채널 특화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체시장의 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시장은 경쟁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손해보험시장은 수요대체성, 부서구분, 허가단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으로 시장을 확정하였다. 일반손해보험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의 경우에는 HHI 지수가 1,200을 상회하고, 합산비율은 100%를 하회해서 집중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자동차보험은 시장구조 지표 측면에서는 집중시장에 해당되나 합산비율이 100%를 상회하여 경쟁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장기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경쟁관계에 있고, 합산비율이 100%를 상회하여 경쟁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스몰라이센스 도입 및 부수/겸영/업무위탁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 방안 연구

임준(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촉진을 위해 채널경쟁력 제고, 상품경쟁력 제고, 허가 시 인적요건 완화, 자본규제 유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고령화, 주요국 사례, 향후 보험회사의 기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을 보험계약자에서 일반 소비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인·허가받은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해당 업법에서 허용하는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함께 영위하였다. 영위하는 금융업 중 본질적 업무는 직접 수행하고 기타 업무는 제3자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니즈 변화, 혁신 스타트업 등장, 산업 융합 가속화 등으로 업무범위 관련 제고 개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주요 내용

업무범위 관련 제고 개선 이슈 중에서 ① 소액단기보험회사와 ②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가운데 하나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이슈를 다루었다.

국내 보험회사 수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산업의 시장구조적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을 위한 소액단기보험업을 최근 도입하였다. 기존 보험회사의 경우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반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일단 소규모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위해 최저자본금 규모는 완화되었으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채널경쟁력 제고, 상품경쟁력 제고, 허가 시 인적요건 완화, 자본규제 유예 내지 차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게 부수업무로 계약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소비자, 보험회사,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국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의 주요기능이 위험인수에서 위험관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인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은 보험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금융당국의 지원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무인비행장치(드론)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상용(연구위원)·이기형(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이아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최근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정부는 드론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에 대해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운영해왔다. 내년부터 비사업용 드론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인용 드론에 대한 의무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용과 공공용 드론은 종합적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비사업용 드론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드론 실명제로 인해 드론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드론보험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드론보험제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2020년 9월 현재 국내 드론의 누적 등록대수는 15,000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 12kg 미만 비사업용 드론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드론의 사용 용도와 사용자 수가 증가하여 드론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사고 시에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업용 드론에 대해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무보험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대인배상책임만을 자동차보험 한도로 운영하다 2021년부터 대물배상책임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드론도 가입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는 개인용 드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자보상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가입은 2kg 이상에 대해 의무보험규정을 도입 후 시행 여부는 피해자 구제 상황 분석 후 결정하고, 2kg 미만은 추후 등록제 확대 시행 시 병행 도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드론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종합보험약관을 개발하고, 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공유와 전산망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는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가입 의무화와 보험가입내용,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위한 규정을 신설·개정하고, 드론 등록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심각한 사고보고 시 원인의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Chapter 07

금융·보험 이슈 연구

CEO Report(제2020-1~12호) | CEO Brief(제2020-1~18호) -

KIRI 리포트(제485~510호) -

KIRI 고령화리뷰(제35~38호) -

KIRI 보험법리뷰(제3~8호) -

KIRI 영상자료(제2020-1~13호)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백영화(연구위원)

CEO Brief 제2020-1호

제20대 국회에서 총 6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중 51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편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및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강화, 의료자문과 관련된 소비자 권리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있다. 그 밖에 손해사정사 제도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지만,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노건엽(연구위원)

CEO Brief 제2020-2호

보험부채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제도(IFRS17, K-ICS) 대응을 위해서는 자산듀레이션 증가, 자본확충도 필요하나 금리변화에 민감한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험부채 구조조정은 보유 계약을 재보사에 전가(공동재보험),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계약이전)하거나 이미 판매한 계약을 계약자로부터 매입(계약재매입)하는 방안이 있다. 거래 주체, 계약유지 여부, 계약자 동의 여부에 따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적합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부채구조조정 방안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도 세계 보험산업 전망

김석영(선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CEO Brief 제2020-3호

2020/21년 손해보험료 및 생명보험료는 각각 약 3%씩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신흥아시아의 성장이 세계 보험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의 경우 세계 보험료가 평균 성장을 회복하여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생명보험의 경우도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의 양호한 ROE로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며 보험회사들은 향후 성장을 위해 기술적·문화적 내부 변화를 통한 운영 및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고 파트너십, 인력양성, 기술투자를 통해 민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김석영(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0-4호

암 발생은 개인 및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 증가와 소득 상실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 민간 암보험은 2018년 약 6조 원의 암 보험금을 지급하여 암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에 따른 암 발생률과 암 보험금 지급기준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안정적 상품 운영을 위해 비갱신형뿐만 아니라 갱신형 또는 요율변동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갱신 시 예정위험률 조정과 함께 약관조정 권한 부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노건엽(연구위원)

CEO Brief 제2020-5호

일본 보험산업은 1980년대 외형 확대 경쟁 이후 버블 붕괴 및 저금리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여러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품 구조조정,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비차익 및 사차익 극대화 등을 통해 저금리에 대응하였다. 보유계약을 전환하거나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신계약을 증가시키고 자산은 대출 및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등 ALM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또한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 확보,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이차역마진 금액을 감소시켰다.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김동겸(연구위원)

CEO Brief 제2020-6호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회사가 GA채널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수준 확보하면서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모집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자회사형 GA채널 구축을 위해서는 고능률 모집인력 활용, 합리적 판매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모회사에 대한 충성도 제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판매상품 및 고객군 차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자사가 강점을 보유한 상품 또는 사업운영 계획이 자회사형 GA채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김해식(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노건엽(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김동겸(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0-1호 | CEO Brief 제2020-7호

코로나19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영업뿐만 아니라 투자영업과 지급여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상반기 내에 진정되어도 영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보험회사는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재검토한 가정으로 위기상황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자본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과 주요 내용

양승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0-8호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2021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판매보수 고지의무는 최종안에서 삭제되었으나 6대 판매행위 규제, 위법계약해지권, 소액사건 분쟁조정 완료 전 제소금지 등 기존 정부안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었는 바, 보험회사들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의 범위, 위법계약해지권 세부내용 등 주요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된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산업과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CEO Report 제2020-2호 | CEO Brief 제2020-9호

2019년 말 회복 조짐을 보이던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하게 둔화되었다. 각국이 유례없는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빠른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가계경제의 위축이 하반기에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망을 하였다.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생명보험: -1.8%, 손해보험: 5.2%).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가 전망된다. 2020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여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4.9% 성장이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동향분석실

CEO Report 제2020-3호 | CEO Brief 제2020-10호

보험회사 CEO들은 ‘투자수익 감소’와 ‘보험수요 감소’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요 위협요인으로 꼽았으며, 주요 기회요인으로는 ‘디지털 금융전환 가속화’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를 선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채널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성장시켜야 할 채널로 꼽았다. 상품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CEO 모두 ‘건강보험(혹은 장기보장성보험)과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상품’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영과제에 대해서는 ‘신기술(빅데이터, AI) 활용 제고’, ‘판매채널 정비’,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중요시했으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 경영과제로는 ‘신성장 기반 조성’, ‘디지털 기반 확대’, ‘보험신뢰 회복’ 순으로 중시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보험료 가격규제 완화’, ‘판매채널 규제 정비’,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순으로 선택하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김동겸(연구위원)

CEO Brief 제2020-11호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약 893억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인력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등록을 유지한 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배제하는 등 수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 부담 방식, 가입대상 설정 등 운영방식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상용(연구위원)

CEO Brief 제2020-12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외이사가 수익성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들이 경영자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보험회사에서 사외이사들이 활동이 기업가치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자에게 객관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조용운(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0-4호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청구 건이 2018년 8천 5백만 건에 이르지만,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초창기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에게는 청구 시간 소모 및 미청구, 요양기관에게는 종이 증빙서류 발급 행정부담 과다,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 지급행정부담 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 전산망과 연결된 보험증계센터(신설, 법 근거 필요)와 요양기관 전산망과 연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법 근거 필요)하여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한다. 이러한 체계는 요양기관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자의 증빙서류 전자전송 요청이 요양기관에게 완전히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 개선안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김해식(연구위원)·노건엽(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0-5호 | CEO Brief 제2020-13호

보험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보험회사는 금리위험 외에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중요한 경영과제가 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K-ICS는 시행시기 명시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IFRS17과 독립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자본관리수단과 경과조치를 허용하여 K-ICS 제도의 연착륙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관리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K-ICS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시장 공시를 개선하여 보험회사 내부통제와 시장규율을 촉진하고,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 및 정리제도 개선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정성희(연구위원)·송윤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기승도(수석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0-6호 | CEO Brief 제2020-14호

그동안 보험산업은 사적연금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안전과 건강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동차보험 및 재난보험을 통해 일상 및 재난 안전 강화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과 위험의 다변화에 따라 소득·건강 지원 및 실생활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일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국민건강 증진·질병예방 사업에 민간파트너로서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성 확보 및 자연·사회 재난의 위험 확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재난관리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I) - 소비자 중심 경영

변혜원(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손재희(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0-8호 | CEO Brief 제2020-15호

소비자 중심 경영의 핵심은 소비자 만족에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소비자의 만족 수준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오해와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험소비 행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보험소비 행태 분석 ②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제도 실효성 개선 ③ 효율적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 ICT를 활용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보험소비자의 행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인지적·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설계 시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과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공익사업 기부를 넘어 소비자가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 수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황현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0-7호 | CEO Brief 제2020-16호

보험분쟁은 보험계약 및 보험업과 관련된 분쟁을 의미하며,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민사분쟁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약관의 해석, 보험사고 발생 여부, 면책사유 존재 여부 등이 다루어진다. 형사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사기가, 행정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문제된다.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 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는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분쟁 발생 시 약관 해석 기준을 정립하여야 하고,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쟁조정제도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적 지위를 확립하여야 하며, 적발 이후 단계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감독당국의 민사분쟁 개입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산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V) - 보험상품·채널

김동겸(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0-12호 | CEO Brief 제2020-17호

보험회사는 취약한 내부통제제도와 단기실적 압박 등으로 고위험·저수익 상품을 반복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모집수수료 다과에 따른 모집인의 상품편향과 상품설계 시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 등은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유사상품경쟁으로 차별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유지단계에서 고객경험은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영업환경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비대면채널 활용도는 저조한 수준이다. 보험회사는 건전한 보험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모집의 질적 평가에 기반한 수수료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고객경험관리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비대면채널 정비 및 인바운드 영업이 가능한 상품공급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비대면채널 규제를 재검토하고,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재판분리 현상을 감안하여 채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원)

CEO Report 제2020-9호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변액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였는데, 이는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 유입보다 계속보험료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이 도입된 2005년 이후 변액보험 보험료는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나, 최근 들어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 회복기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변액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이나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또한 변액보험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채널 적합성을 고려하여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개인보험시장 동향

김세중(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CEO Report 제2020-10호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판매채널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종목별로는 사망보험이 2020년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이었고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상반기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인 생명보험 해지율은 3월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준이다. 2020년 상반기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판매가 급증한 원인은 예·적금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로 인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수익을 저축보험 판매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 가입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신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윤성훈(선임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0-11호 | CEO Brief 제2020-18호

일본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파산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가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위험관리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산 교훈으로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무엇보다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였고,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사의 상품별 내재가치(Embedded Value) 공시를 통해 내·외부 규율을 강화하였으며,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평가와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이규성(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85호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및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수행하는 대만 보험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15년간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 2018년 기준 전체 운용자산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한다. 금리역마진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구조변경 등과 함께 해외투자를 확대하였고, 투자환경 및 규제환경 요인에 의해 해외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만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금리역마진을 완화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대외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 사례를 참고해볼 때,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보험회사가 적절한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87호

거품은 기대심리에 의해 비합리적인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지역별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2029년 10월 현재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7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남구와 용산구(2017년 4월)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었으며, 이후 서초구, 송파구 및 양천구(2017년 6월), 영등포구(2017년 7월), 강동구(2017년 9월) 등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같은 방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서울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였으며, 거품은 강남구에서 먼저 시작하여 강남구에서 먼저 꺼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혼인을 급락의 구조적 특징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89호

연령대별 혼인을 추이를 보면, 남성, 여성 모두에서 혼인을 미루는 만혼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혼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연도별로 보면, 1983년생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출생자들에 비해 20대에서는 혼인율이 낮고 30대에서는 혼인율이 높아지는 만혼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1984년생 이후에는 전년도 출생자들에 비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혼인 성향에 있어 세대가 단절되는 코호트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의 혼인율 하락 현상은 무배우자들의 일반적인 성향 변화가 아니라 혼인 성향이 다른 1984년 이후 출생자들이 혼인 적령기에 진입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혼인 감소가 특정 세대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성향 변화에 기인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이전 제도 해외사례 비교 검토

김석영(선임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89호

과거 우리나라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조건 변경 없는 전부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자가 전혀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한도 상한 설정, 공동부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도입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소액가입자를 보호하는 반면 일본은 모든 계약자에게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자 보호 방법은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부실 보험회사 정리 제도 정비 시 먼저 금융당국의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보호한도 또는 공동부담 비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KIRI 리포트

기업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모형 검토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0호

자연재해, 테러, 감염병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보험회사가 동 위험에 대한 보장을 중단하여 보장공백을 초래한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회사가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입자 입장에서 너무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여 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각국 정부는 해당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보험시장 참여자로 개입한다. 자연재해, 테러, 감염병 등에 대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동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기업에 물적 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초래하는 재난적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험회사와의 위험공유방식과 가치사슬 개입방식을 정책목적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 위험에 대비해 정부가 보험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내재된 위험과 보장공백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 방식 및 범위를 능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재난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은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마중물적 성격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0호

코로나19 사태 관련 강제폐쇄 명령·공급망 중단·구매 중단에 따른 조업중단손실이 커짐에 따라, 기업휴지손실에 대한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형자산의 손해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재물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실에 대해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이다. 9/11테러 당시 미국 기업의 피해 보상 및 지원액의 약 73%는 보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중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이 약 33%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 신규 리스크는 과거 경험데이터와 사고의 우연성이 충분치 않으며 손실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기업휴지보험 특약이나 가입한도 등을 다양화하여 기업의 니즈에 대응해야 한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 부담에 대한 논의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1호

자영업 가구의 실질 소득은 2012년 이후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실질 처분가능 소득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는 소득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조세, 사회보장,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났다. 자영업 가계의 비소비 지출이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킬 만큼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세나 준조세 등에 대한 가계 부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영업 가구가 납부하는 준조세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도 납부 부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당국도 자영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가계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노력도 더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후위험 공시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1호

이상기온 및 자연재해의 빈발과 함께 기후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 경제로의 정책적 전환이 본격화되며 금융회사의 자산가치 변동에도 영향이 커지면서 투자자를 위한 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 관련 금융공시 작업반(TCFD)을 구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보ehm포럼의 설문에 의하면 TCFD 권고안은 주로 대형 보험회사가 선도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ESG 및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이를 시장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가계부채 저량(Stock)의 시대 도래와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2호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민간소비 증가율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모습이 약해지는 등 저량의 영향이 유량의 영향을 압도(저량의 시대)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저량의 시대에는 가계의 부채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계소비 는 유량의 시대보다 대내외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조정될 때 가계부채 조정이 동반될 경우 이전의 아파트 가격 하락 시보다 소비에 대한 충격을 더욱 커질 것이다. 일본이 기업부채 조정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에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한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되면 현재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경기의 재정 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보험산업 대응

황인창(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2호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수요와 공급에 충격을 주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는 보험회사 순자산가치 감소와 신규 투자에 대한 수익률 감소로 이어져 건전성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의 자산 구성을 살펴볼 때, 환헤지비용의 증가, 수익증권의 가치 감소, 대출채권의 손상 증가 등이 우려된다.

생명보험은 해외투자 비중이 높아 환헤지 비용 증가 및 증거금 관리의 어려움이, 손해보험은 수익증권 및 위험대출 비중이 높아 보유 위험자산의 가치 하락(또는 손상)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변동성 증가는 보험회사의 시장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국제 혼인 증가의 특징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5호

우리나라의 국제 혼인 건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이가 발견된다. 국제 혼인의 추이는 남녀 간 동조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성은 감소세를 남성은 증가세를 보이는 탈동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 혼인 건수의 변화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최근 다양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내국인 간 혼인이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국제 혼인은 증가하면서 전체(내국인 아내+외국인 아내)에서 국제 혼인(외국인 아내)의 비중이 2015년 4.95%에서 2019년 7.58%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내국인간 혼인과 국제 혼인 모두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기피 현상 속의 성비 불균형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남성의 국제 혼인 의존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민원대행업 규제개혁과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홍민지(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5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장치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보험시장에서는 권익보호라는 명분하에 대행업체에 의한 민원 모집 및 영업이 이루어지는 감독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민원대행업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업종으로 볼 것인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이에 기반한 감독측면의 접근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은 2007년 보상금청구·민원 관리업(Claim Management Company: CMC)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후 감독상의 시행착오를 겪고 2019년 4월 감독권한 이관 및 관련법 재정비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CMC의 제도화와 CMC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장치들만으로는 권익구제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보상금 청구 및 민원 관리업이 업의 속성상, 부정·위법행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CMC의 제도권 편입 시 강도 높은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 마이너스 실질금리 장기화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5호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강력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행 시 경험하지 못한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노출되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더라도 누적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나 중앙은행은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큰 증세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정부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을 선호할 수도 있다. 정부부채 확대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용인(물가관리목표 상향 조정 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도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파산과 생존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5호

일본의 경우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20위 생명보험회사 중 독자적으로 3개 회사만이 생존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ALM 개념을 인지하여 자산 거품 붕괴 이전과 이후 업계의 일반적인 영업과 자산운용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타이요(太陽)생명의 경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월납 양로보험(입원비 및 수술비 보장) 판매에 주력하면서 사차익(질병위험률차익)을 크게 확보하였고, 주식, 대출, 해외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중이 낮았으며, 배당을 늘리지 않고 이익의 내부유보를 확대하였다. 다이도(大同)생명은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보험에 집중하였으며, 자산 거품 붕괴 직후 자산구성을 국채 위주로 빠르게 전환하였다. 후코쿠(富國)생명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을 공급하였는데, 자산운용 및 계리부서의 의견을 중시하여 개인연금이나 변액연금 등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신계약 확대보다는 우량고객 선별 및 계약의 유지관리를 중시하였다.

최근 소비 감소의 가구 유형별 특징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7호

2020년 1/4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증가율이 소득보다 10%p 이상 낮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1/4분기 소득과 소비 증가율 겹을 가구 유형별로 볼 때 고령층 가구일수록 맞벌이 가구가 아닐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소득수준, 가구주 교육수준, 자녀 수, 주거형태별 구분에서는 증가율 겹의 특별한 법칙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에 비해 소비가 크게 감소한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와 맞벌이의 가구는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상품 서비스」 등 대인 접촉이 많은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비 축소는 코로나19가 갖는 질병적 특징이 가계의 소비활동에 직접적이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성공적인 방역이 내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노건업(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499호

공동재보험(Coinsurance)이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게 출재하여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채만 이전하는 변형된 유형도 존재한다. 국내 감독규정에서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방식은 출재비율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는 비례 재보험으로 한정되며, 금리위험 전가효과가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된다. 국내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을 전가하는 공동재보험 계약체결을 시도한 바 있고 해외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금리확정형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의 시장 위험 전가에 활용한다. 공동재보험 도입은 자본관리수단 확대에 의의가 있으나 다른 방식의 부채조정방안 도입 검토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개인보험 소비자 수요 변화: 인터넷 검색량 분석

김세중(연구위원)·최예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0호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제적 충격은 개인보험 소비자들의 보험 해지, 보험종목별 수요, 판매채널 선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검색어의 인터넷 검색량 추이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둔화는 개인보험 가입자의 보험 해지를 확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검색량은 3월 중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상품별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시기 건강보험과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속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온라인(디지털)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개인보험 수요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IT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태도 및 의식 변화를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시장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정 진료와 비급여진료비 관리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0호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크게 취약 계층이나 공공성이 높은 의료 분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의료시장 내에서 '적정 진료'를 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21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특수한 환자나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에서의 비중도 매우 작아 의료 관행을 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비급여본인부담률도 2011년 28.7%에서 2018년 11.7%로 크게 낮추고 있어 '적정 진료'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위축되고 급여본인부담률도 2017년 19.6%에서 2018년 22.8%로 크게 상승하여 비급여에 더욱 의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비급여 의존도가 대형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에 양극화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자 부진 장기화와 잠재성장률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1호

2020년 하반기 경제 성장의 반등을 위해서는 소비, 수출 등의 회복 뿐아니라 국가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총고정자본형성)의 회복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이미 2018, 2019년 연속 감소한 데 이어 2020년 2/4분기에도 감소하여 투자 부진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잠재성장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자본스톡 증가율이 유일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투자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자본 스톡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잠재성장률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내 경제의 투자 환경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2호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성 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 교통량 및 의료이용, 개인 이동량은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건강 및 질병보험의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대면영업채널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시 2020년 상반기와 같은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는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각종 지표는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현상과는 다를 수 있으나, 전염병의 확산 시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전용식(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3호

경미사고와 경상환자가 증가하면서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2% 내외의 보험료 조정압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 치료와 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경상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과 불만 확대는 자동차보험제도가 사고유형의 변화와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인당 치료비의 증가와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치료와 배상에 대한 인식이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치료로 인한 치료비 증가는 합의금 증가로 이어진다. 캐나다의 경우 초진 이후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1, 3, 6, 12주 4단계로 규정하고 단계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상해평가 및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합의금(위자료) 상한을 설정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유형에 부합하는 치료 관행과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계사 인력특성과 관리 필요성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4호

보험산업 내 전체 설계사 인력규모는 정체된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전속설계사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업권별로 매년 약 4~5만 명가량의 인력 유출입이 반복되고 있다. 설계사 조직은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유효한 유통채널로 기능하고 있어 대규모 고용과 인력이동이 반복되는 현상은 조직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인력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가 요구된다.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면영업에서 비대면영업으로의 전환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나, 채널 전환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인력조정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업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확대차원의 설계사 인력의 대규모 충원과 이탈은 저성장 환경하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생산성(Productivity)과 정착률(Retention) 예측모형 분석을 통해 자사의 영업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모집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설계사 정착률 현황과 보험회사의 과제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5호

2019년 기준 설계사의 13월차 정착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38.2%, 53.3%로 신규로 채용된 설계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1년 내에 조직을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인력의 이탈은 보험회사의 비용 증가 및 생산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 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기업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사의 이탈은 인적 특성, 본인이 종사하고자 하는 산업 또는 기업의 성장 기회, 보상수준 및 조직 내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 외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도, 조직 내 갈등 등이 설계사 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 인력의 조기탈락을 막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설계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직문화를 보다 수평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조직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계사 보상체계가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유지수수료 비중 확대 등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계사 소득양극화 현상과 향후 과제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6호

개인의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설계사의 소득분포는 저소득 구간과 고소득 구간 양측의 비중이 모두 높은 양극화된 'U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소득수준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연고 위주 영업방식과 고연령화된 판매인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계사의 상당수가 기존계약자 관리를 통한 추가영업이나 연고모집에 의존하고 있어 초기에는 지인 위주 영업으로 일정 수준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추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득이 감소하고 영업조직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설계사 인력 대부분인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연령층 고객과의 점점 마련이나 교감을 얻어내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비대면채널 성장,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설계사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소득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 조직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설계사 정착률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신입 및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능률 조직으로의 개편을 유도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시장개척 영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 비은행 SIFI 규제의 개정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6호

미국 비은행 SIFI 규제의 변화를 그동안의 보험권역 시스템위험에 대한 국제기구 논의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의 비은행 권역, 특히 보험권역의 시스템위험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개별회사의 SIFI 지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모형 중심의 시스템위험 관리에 중점을 둔 비은행 SIFI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2월에 발표하였다. IAIS 등 보험권역 국제기구의 시스템위험 관련 논의도 총체적 체계로 불리는 사업모형에 따른 권역 전체의 시스템위험을 감시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국제기구 논의와 미국 비은행 SIFI 규제의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시스템위험 관련 규제는 개별 회사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금융권역 전체의 사업모형을 고려하여 금융시스템에 주는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비교를 통한 보험산업의 중장기 성장성 평가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7호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국제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보험료가 경제성장률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논의하였다. 보험료 성장률이 경제 성장보다 클수록(보험 침투도가 상승할수록) 성장성이 큰 것으로, 보험료 성장률이 높아도 경제 성장을 밀둔다면(보험 침투도가 하락)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생명보험 침투도는 2004~2012년에는 상승세를, 2012~2018년에는 하락세를 보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전기에 상승그룹에 속했으나, 후기에는 하락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침투도는 생명보험과는 대조적으로 2004~2012년에는 하락세를, 2012~2018년에는 상승세를 보인 국가가 더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전기에는 상승그룹에 후기에는 보험그룹에 속하였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의 성장성이 양호해 보이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

변혜원(연구위원)·손지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8호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재정 악화는 보험사기 유인을 높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 방법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사자가 의심 건을 추출하는 방법에서 데이터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국내 보험회사에서는 주로 자동 위험징후, 예측모형, 데이터 시각화, 이상감지 등의 기술을 보험사기 방지·적발에 사용 중이며, 회사 내 보험금청구 및 계약 정보와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정의나 형식을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보험사기 데이터분석기법이나 AI 기법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보험계약, 지급데이터 이외에 분석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시스템이 부당한 차별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09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의 증가, 근골격계·안과질환에 집중, 소수 의료이용에 편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첫째, 2020년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 1,530억 원 규모로 2017년 상반기(6,417억 원)보다 무려 79.7% 증가하였다. 둘째, 실손보험 청구금액에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근골격계·안과질환이 상위 청구 항목에 집중되고 있다. 셋째,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해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이용을 한 대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특히 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를 악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형평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이용량을 반영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경영 및 환경 평가의 중장기 변화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의 설문을 중심으로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0호

본고는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의 설문점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해 보았다. ‘기업 경영’ 분야의 경우 점수가 개선된 설문들은 ‘경영층의 능력’과 ‘IT 기술’로 대변되는 반면, 하락한 설문들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인재’ 분야의 경우 점수가 상승한 영역은 ‘전문 인력’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하락한 설문은 ‘일반 근로자’로 대표되었다. ‘금융 투자’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모든 설문에서 점수가 개선되었으며, 순위까지 상승한 분야는 ‘자본시장’과 ‘금융 지식’으로 나타났다. ‘제도 환경’ 영역에서는 점수가 개선된 설문 내용은 ‘창업’, ‘과학’, ‘개방’으로 요약되는 반면, 하락한 설문은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술 중심의 신산업이 성장할 환경은 개선되고 기존 산업의 생존 환경은 악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

최원(수석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85호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 공유경제 확대 등으로 모빌리티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의 환경 변화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 시스템의 전방위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모빌리티 업체와의 제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부담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

변혜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86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부담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공·사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보험사기 및 부담청구 대응, 특히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담청구의 효과적인 적발과 방지를 위해서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데이터 및 정보공유, 데이터 분석,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이 필요하다.

흡연 행태 변화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홍민지(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86호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 흡연율과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흡연을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할 전체적인 흡연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흡연 행태에 대한 보험요율 차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변화하고 있는 흡연 행태를 주목하여 체계적인 흡연 리스크 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Solvency II 경과조치 개정논의와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손민숙(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87호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Solvency II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경과조치 방안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경과조치 적용으로 다양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경과조치의 추가승인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EIOPA는 공개협의안을 통해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경과조치 추가승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신지급여력 제도(K-ICS)에서 경과조치 도입 시 승인의 일관성을 중시하고, 공시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호주의 금융기관 경영자 보상에 대한 규정 개정과 시사점

한상용(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88호

최근 호주 건전성 감독청(APRA)이 제안한 금융기관 경영자 보상에 대한 새로운 건전성 모범기준(Prudential Standards on Remuneration, CPS 511)은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경영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자 보상에서 성과보수의 이연기간 확대, 성과평가에서 장기성과급 산정 시 비재무적 지표들의 활용, 보수의 축소 및 환수조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주의 금융기관 경영자 보상에 대한 개정안은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세대별 노인 문제의 심각성 비교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88호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부터 1차 베이비부머가 65세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규모는 1차, 2차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서 급속히 증가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60년 이후에도 크게 감소되지 않고 1,800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인 부양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심각성은 세대가 지날수록 심각해져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감염병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88호

의료기술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및 인구밀도 증가, 사람과 동물 간 접촉 증가, 기후변화, 국가 간 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빈도와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MERS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리스크의 부보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창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89호

올해 1월 국회는 정보통신망법의 정비,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 격상 및 관리감독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3법을 의결하였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기관 간의 데이터 결합 및 공유가 용이해져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 및 효율 고도화가 수월해지고 관련 학술 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0호

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의 2018년 기대수명은 각각 79.7세, 85.7세로 2017년 기대수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수명 정체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남녀 기대수명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2008~2010년 사이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30~60세 중장년층의 사망률 개선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주요 장수국가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세 변화는 종신연금 보유계약 수익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변혜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2호

효과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최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였다. 해외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현존하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사취소보험 시장 현황과 과제

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3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행사취소가 발생하자,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IOC를 비롯하여 FIFA 월드컵, Wimbledon 테니스대회 조직위 등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해 왔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행사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팬데믹 발생으로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는 관련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

김진억(수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3호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엄격하게 운영해 온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긴급자금 수요에 대처하고자 법(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퇴직연금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한국도 코로나19 등 재난적 감염병으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거나 중도대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본인의 저축자금을 활용하여 재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제로금리시대와 변액보험 보증 위험 관리

노건엽(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3호

변액보험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해 보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증 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대형사와 외국사만 해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지를 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변액보험의 보증 위험 해지를 하지 못한 해외 보험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해지를 실시한 회사는 손실을 축소할 수 있었다. 보험회사의 보증 위험 해지를 위해서는 보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위험 관리 체계 마련과 더불어 보증수수료 프라이싱 정교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피해의 증가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4호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건조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의 산불발생 면적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구온난화의 진행과 함께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히 봄철과 겨울철에 건조주의보 발령일수가 늘어나고 강수량 및 강수일수가 줄어들며 건조화가 진행되면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과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산림화재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통하여 산림자원에 대한 예방적 위험관리와 함께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호주 환급세액의 연금재원 활용과 함의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4호

호주는 '세액환급금'과 '매칭보조금'을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여 노후자산 축적을 제고하는 연금가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액환급금은 부과된 세액의 일부(보험료의 15%)를 환급하는 세제혜택 제도이며, 매칭보조금은 보험료 납부 시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세액공제액을 계좌환급하여 노후자산을 축적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입유인을 제고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4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여행보험시장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이나 국내 숙박·행사의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의 환불이나 위약금(취소수수료)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여행취소 대란을 통해 소비자의 여행취소 보장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국에서는 여행보험 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여행보험은 생활밀착형 상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위험 인수자로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 수요에 긴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단기 사망률 변동성 확대

김세중(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6호

코로나19는 단기적인 사망률 증가 충격을 가져왔으며, 사망률 변화에 민감할 수 있는 연금사업자들은 단기적인 사망률 충격 수준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사망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020년 6월 1일 기준 271명이며, 이는 2018년 연령별 사망자 수 대비 최대 0.1% 수준 증가한 것으로 장단기적인 사망률 변화를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나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분석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상승 현상과 시사점

조영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6호

최근 보험회사의 금융자산처분이익 확대로 운용자산이익률이 상승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 자산듀레이션 확대 과정에서 금융자산처분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회사는 자산듀레이션 확대와 함께 위험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처분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환경에서 과도한 금융자산처분은 향후 이자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운용자산 대비 이자수의 비율이 낮은 회사들이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의 이자수익 감소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감독이슈

황인창(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8호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사업모형을 출현시키고, 가치사슬의 분절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비자는 보다 개선된 고객경험을 제공받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경쟁회사 대비 비교우위 요소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기술회사와의 관계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한 가치사슬의 분절화는 투명성 하락, 이해 충돌, 경쟁 저하, 집중 리스크 발생 등 행위 및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큰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상용(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8호

최근 저금리로 인한 고수의 추구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역외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국제교역 관련 보험이나 재보험만을 역외보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도 역외보험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역외보험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소매 판매의 회복세와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499호

2020년 1/4분기 이후 특별소비세,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승용차 판매, 슈퍼마켓 매출 등을 중심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음식료품, 가전, 가구 등의 판매와 무점포 소매점의 매출이 소비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류, 가방, 화장품 등의 판매와 면세점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전반적인 소비 회복 가능성은 코로나19의 극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험산업 장기투자 활성화 과제

황인창(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0호

최근 ‘한국판 뉴딜’이 발표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장기 기관투자자인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 환경 심화 및 자본규제 강화 등에 따라 장기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투자처 부족·규제적 역유인·단기성과주의 등이 장기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장기투자자로서 보험회사 역할 강화를 위해 장기 투자자산의 지속적 공급, 투자유인 및 위험전가 기회 제공, 회계제도 및 자본규제에서 장기투자의 특성 반영,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투자 의사결정 지배구조 확립 등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1호

세제적 연금저축의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금저축의 지속적인 납입비율 감소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시장 확대에 따른 대체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유사한 성격의 노후소득 확보수단으로 양 상품 간의 대체는 소비자 선호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IRP에 비해 세제혜택 한도가 낮아 선택에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IRP와 같은 수준인 7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생명보험회사 파산과 경영 리더십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2호

생명보험회사 파산이 인재이나 아니면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변화 때문이나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인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2023년 부채시가평가 시행을 앞두고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초저금리와 역성장 등으로 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경영 역량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 거품 붕괴와 저금리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경영 환경 변화에 파산의 책임을 넘긴 일본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기부 및 자발적 상호부조의 변화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3호

우리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기부와 유사한 '비영리단체로 이전'이나 사적 상호부조 성격의 '가구 간 이전지출'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회복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지표들은 공통적으로 2020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난 지원금 등 공적 부조의 확대', '가구 스스로의 위험 대비 수요 증가', '종교 활동의 위축'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4호

201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금의 청구 증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성 제고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 증대를 위해 공·사 협업하에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손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와 시장원리로 수요나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언택트 시대의 보험영업규제

변혜원(연구위원)·손지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4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채널의 역할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보험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 환경에 기초하였던 영업행위 규제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청약과정에서는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는 기술을 활용하되 서명, 덧쓰기 절차의 간소화를 고려해야 하며, 모바일·컴퓨터를 활용한 해피콜을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저축상품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후생 제고와 소비자권의 강화를 위해 고려할 것은 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나 절차가 아니라 어떻게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 대만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5호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 중 보험시장 규모가 큰 일본과 대만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공표하였다. 일본은 금융청 주관 외부자문위원회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경제가치기반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2025년 도입 일정을 제시하였다. 대만의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영향 평가, 병행 시행, 전환 기간 등 3단계로 도입일정을 구분하고 2026년 시행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그간 K-ICS 평가 방법론과 시행 일정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본/대만 사례와 유사하게 내부모형, 공시, 경과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KIRI 리포트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점

김규동(연구위원)·김윤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7호

2015년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판매된 이후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과거 북미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지율 적용의 중요성이 경고되었으며, 해지율 관리 실패로 인해 보험회사가 파산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을 제한하고 해지율 산출기준을 제시하는 제도 개정을 발표하였다. 제도 변경에 대해 일부 시장의 반발이 있으나, 해지율 관리 실패로 인한 보험회사 파산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 및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7호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손해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 중 30~40대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60대 이상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의 평균 월납보험료는 하락하였다. 한편 운전자보험을 2건 이상 보유한 가입자 비중이 상승하였는데, 소비자는 실손 보장 담보에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 확대로 운전자보험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회사는 고령층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최원(수석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8호

2020년 이후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은 임의보험인 대인II를 중심으로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보험료 인상효과로 원수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보험소비자 반복가입 행태 분석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09호

보험회사와 신뢰·만족 등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보험소비자들은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건의 보험에 반복하여 가입하며, 고연령층에서 반복 가입자 비중이 높다. 또한 보험소비자는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반복가입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한 보험회사에서 서비스를 경험 후 만족하여 보험료가 더 높은 보험에 반복가입 하였음을 시사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 제고 및 수익성 개선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으므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자서명법 개정과 보험회사의 CM 채널 활성화

김규동(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0호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 방식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바이오 인증, 사설인증, 분산신원확인 등이 있는데, 보험산업에서도 이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CM(Cyber Marketing)을 이용한 보험판매는 부진한 상황이지만, 향후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으로 CM을 이용한 보험판매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품 특성에 맞는 설명의무 완화 및 지문정보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 제도적인 뒷받침은 CM 채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전용식(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0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피해자들의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인데 반해 대인배상 보험금 중 치료비는 과실상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실제 치료관계비 전액이기 때문에 쌍방과실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실상계로 줄어든 대물배상 보험금을 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상환자 보험금 관리를 위해서는 치료비에 사고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포커스) 제35호

OECD 국가의 연금체계는 크게 공적연금 보완형과 대체형으로 분류되며 본고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에 주목하고 있다. 보완형 연금국가의 경우 공적부문은 부분적 개혁과 근본적 개혁으로, 사적부문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되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공적연금 개혁 중 부분적 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정안정화(보험료 인상, 급여 인하) 조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소득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근본적 개혁으로 스웨덴과 같이 NDC로 전환하거나, 부분민영화, 최저보증연금 도입을 추진하였다. 한편, 사적연금의 경우 세제적격 개인연금(리스터연금), 가입범위 확대(전업주부 가입), 준강제화(자동가입제도), 세제혜택 강화(베이비부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사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연금제도 개선 기구를 설치하고, 개혁의 우선순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혼, 출산, 다자녀 기피 현상이 출생아 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포커스) 제35호

최근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모두 빠르게 감소하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자녀 기피’와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는 2002~2015년과 2015~2018년 기간 모두에서 주요한 출생아 수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의 경우는 2002~2015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 증가에 양의 기여를 하지만 2015~2018년 기간에는 급반전하면서 출생아 수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이 출산의 경우 2002~2015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빠르게 커졌다. 종합하자면 2000년대 들어 출생아 수 감소를 꾸준히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자녀 기피’와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인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는 ‘결혼 기피’와 ‘출산(첫째 아이) 기피’까지 더해져 출생아 수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빈곤과 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포커스) 제36호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이 적고 퇴직 후 소득절벽으로 인해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빈곤율은 가구 단위로 추정되므로 전체 소득이 변화가 없더라도 가구분화로 인해 빈곤 가구가 될 수 있어 소득만으로 빈곤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인가구의 분화는 2세대 이상에서 1세대 가구로 세대 간 분화되거나 황혼이혼으로 인한 세대 내 분화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렇게 가구분화가 되면 가구는 소규모화되고 가구 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구분화는 70세 이후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노인/자녀가구의 분화로 인해 노인세대 소득은 분화 전 가구소득의 38.7%로 나타나 노인빈곤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가구 규모 변화로 빈곤가구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소득 정책과 더불어 가구 형태 변화를 고려한 노인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RP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평가 및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포커스) 제37호

2012년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조한 가입률, 중도인출 증가 등으로 퇴직급여 제도의 퇴직적립금이 이전·적립(연속성 기능)되지 못하여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IRP는 이직 및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연속성(Portability) 제도이나 저조한 추가가입, 이직 시 퇴직금의 IRP 이전 미흡, 과도한 중도인출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IRP 비중은 10.1%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IRP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① IRP 가입의무화 연령을 정년 의무화 연령인 60세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정 퇴직금제도의 퇴직일시금을 IRP로 자동 이전할 필요가 있고, ② IRP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생, 전업주부 등에게도 가입을 허용하며, ③ 코로나 환경을 고려해 중도인출 범위 및 사유를 탄력적으로 가져가되 향후 연금재원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인출 사유별 한도 설정 등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포커스) 제38호

경제가 성숙할수록 총수요의 안정성을 위해 민간소비의 뒷받침이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민간 소비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40대 가구의 저축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10년대에 들어서는 50대 및 60세 이상 가구의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세대의 저축률이 10년 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하는 형태로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40대가 10년 후 50대에, 50대가 10년 후 60세 이상에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에 뚜렷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노후 소득 불안이 저축률 상승의 원인일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대표적인 노후 소득 여건으로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금리의 하락을 들 수 있다. 특히, 금리 하락은 일정한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산(원금)의 규모를 예상보다 훨씬 커지게 하면서 노후에도 저축을 우선시하게 되는 현상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금의 연계상품 해외사례와 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5호

고령화 과정에서 보험과 연금 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연금연계형 상품은 드문 편이다. 미국, 영국, 독일은 질병 혹은 간병에 대한 재원으로 오래전부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연계되거나 특화된 상품(주계약)인 장기요양연금(The Long Term Care Annuity)을 통해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혼합형 상품에 연금급여가 주계약이고, 요양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적격연금상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연계상품이 제공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전형(Non-standard)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연금정책과 함의

정인영(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5호

대다수 국가에서 운영 중인 연금정책은 전일제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채용된 자들을 일괄적으로 포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최소소득기준, 근로시간, 가입기간 등의 요건이 적용될 경우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는 제도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비전형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가입 의무화, 보장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는 가입요건(Eligibility), 제도통산성(Portability)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근로형태를 반영한 연금제도 설계를 권고하였다.

인구 고령화와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6호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지역의 노인층이 소비 여력을 높이고자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어느 지역의 고령화율이 높아지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인구 고령화와 아파트 가격 간에는 인과관계보다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25개 구별로 고령화율과 아파트 가격 변화율 간의 관계는 최근 들어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화와 아파트 가격 상호 간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

김동겸(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6호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악화 가능성은 근로형태에 따라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고, 감염병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소득계층 및 고용형태에 따라 그 충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이는 다시 건강불평등, 교육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RI 고령화리뷰

코로나19 이후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 확대와 대응방향

최장훈(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7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세대 간 디지털정보화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정보 격차는 고령층에게 '디지털 소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상품 등 소비활동 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정과 교육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교육 및 금융회사에 대한 지침 등 고령층을 위한 금융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2020 공·사 연금제도 개혁과 합의

이상우(수석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7호

최근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확산과 고령자 취업 의식 확대, 정년연장법 시행에 대비한 공·사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률들이 제·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단시간근로자의 공적연금 적용 확대, 공·사연금 수령 연령 연장, 재직자연금 기준 완화, 퇴직연금제도 가입연령 확대, 중소기업의 개인형DC 가입 활성화 조치, 탈퇴일시금 기준 완화 등이다. 일본의 2020 연금개혁은 고령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전 국민 포용적 복지제도로 전환하는 대표적 개혁 사례이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직자연금제도 개선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 등 공·사 연금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치매보험시장 현황 및 의의

정인영(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7호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 이후 치매고령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매 발생 시 경제적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산과 더불어 치매예방 및 조기대응을 위한 강화된 정부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최근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위험선택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금 지급요건을 차별화한 치매보험 상품 출시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치매환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 정부의 정책사례를 참고한 정부의 정책대응 및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역할 대응이 요구된다.

정보제공을 통한 퇴직연금 가입자 행동변화 유도

김동겸(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8호

퇴직연금 실질수익률은 저금리 상황과 더불어 원리금 보장형상품 중심의 적립금 운용,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1%대에 불과하며, 일시금 선호 현상으로 연금전환율은 2.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입자의 현실편향으로 인한 불합리한 운용행태 방지, 연금지급방식 선택 유도를 위해 '연금 공시규칙(Lifetime Income Disclosure Rule)' 시행안을 발표하였다. 확정기여형(DC) 제도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노후자산이 변화하므로, 가입자의 행동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호주의 퇴직연금 인출상품 재정비 현황

장철(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8호

호주의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인출상품을 본격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은퇴소득상품(Comprehensive Income Product for Retirement)의 요건으로 '안정소득', '장수위험', '유연인출'을 제시하였다. 동 여건 중 장수위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신연금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호주는 행동경제학적 요소가 반영된 상품공시 기준을 제시해 가입자의 적격 은퇴소득상품 선택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인출상품에 대한 개발과 요건, 그리고 선택의 유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위원)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8호

최근 일본에서는 건강경영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경영 실시 기업에게 기업 인증과 공공 입찰 시 가점, 대출 우대, 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단체형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 보험상품·헬스케어·4차 산업이 결합된 개인형이 처음 개발된 이후 2017년에 단체형으로 개발되어 현재 5개 보험회사가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를 위해 건강경영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는 건강경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업의 보험상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3호

2019년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산업 및 보험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 8건을 선정하여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그 내용과 의의, 문제점, 향후 과제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① 가동연한(2018다248909):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다. ② 태아의 피보험자격(2016다211224):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태아를 피보험자로 명시하였다면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질병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보험사기 기수시기(2014도2754): 기망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닌 보험금 수령 시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직접청구권(2018다300708):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법원은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구속받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I)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4호

2019년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산업 및 보험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 8건을 선정하여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그 내용과 의의, 문제점, 향후 과제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⑤ 임원배상책임보험(2016다277200): 임원배상책임보험의 ‘claim’은 민사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소송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기업보험의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⑥ 과실비율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2017다217151): 과실비율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부제소합의로는 볼 수 없다. ⑦ 기왕증 고려 범위(2015다8902): 기왕증의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손해항목별 손해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하고, 가해자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⑧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2018다28124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체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병명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4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은 문언상 불명확한 부분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 많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위반'과 소비자의 '계약 체결' 간에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소비자의 해지 요구 시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차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은 해석상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해지 시 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나, 위 문언만으로 보험상품에 관한 금전 반환범위를 알기 어려워 이를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장기간 거래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행사기간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 상품별, 계약기간별로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5호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반환가능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남은 손해액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위 판결의 취지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① 자차보험의 기능, ②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③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④ 자차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 2014다46211판결의 취지를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경우 보험료 인상 및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적,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의 분류와 보험 관련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5호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를 규제한다. ‘금융상품’에는 기본적으로 권역별 법령에서 정한 금융상품(예금, 대출, 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이 해당되며, 그 밖에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는데, 먼저, 기존에 보험상품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던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특별법 상 공제 등이 보장성상품으로 보험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 제정으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담보대출 등도 대출성상품으로 규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명칭과 달리 법적 성격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계약자의 권리로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대출성상품으로 규제함은 적절하지 않다. 소비자보호 필요성, 감독의 효율성 및 규제필요성을 두루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Whiplash Reform)의 내용 및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6호

영국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 관련 분쟁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담 가중을 해결하기 위해 위플래쉬 개혁(Whiplash Reform)을 추진하였다. 위플래쉬 개혁은 ① 통증·불편(PSLA) 관련 보상기준 마련 및 ② 합의 시 진단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국 정부는 위플래쉬 개혁을 통해 연간 £11만(약 1조 7천억 원)의 지출이 절감되고 자동차보험계약 1건당 £35(약 5만 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플래쉬 개혁은 개혁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는 점 및 진단서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허위·과장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은 자칫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허위·과다 청구 방지 및 보험금 지급 합리화를 통해 전체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향후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관련 영국 등 주요국의 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RI 보험법리뷰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대한 모집 규제 적용 여부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7호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는 등 보험업법상 비교·공시의 요건들을 갖춘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면 모집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료 비교 사이트의 구성 및 게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집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가 아니라 그 실질이 보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집 자격이 없는 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보험 모집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나 기초서류 준수 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8호

지난 10월 말 금소법의 적용대상, 각 규제 적용범위, 판단기준 및 절차 등 주요사항에 관해 위임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의견 수렴 중인 바, 보험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 시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예컨대, 입법예고안은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성상품으로 규제하고, 판매업자 등이 자체점검, 민원, 감독·검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 명확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 측면에서 규제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도 특히 행사기간, 정당한 사유, 계약 해지 관련 비용 등 세부사항에 관해 입법예고안의 내용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최종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주요국 전동킵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8호

전동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법제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전동킵보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PM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서 보험제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은 전동킵보드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전동킵보드는 기존 자동차보험 및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동킵보드 보험제도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i) 전동킵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인지, (ii) 자동차가 아니라면 별도의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지, (iii) 별도의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할 경우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전동킵보드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전동킵보드의 특성 및 현행 규제 체계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대신 전동킵보드 사고 피해자 및 킵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전동킵보드 의무보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 시 고려사항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3호

의료자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의료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자문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장기적으로는 감독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자문의 역할과 순기능(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방지)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속 보험판매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미국연방항소법원 최신 판례 분석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3호

미국 보험회사 전·현직 전속 보험판매인들(Insurance Agents)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심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항소법원은 이를 번복하고 (i) 보험의 판매는 고도로 특화된 분야이며 상당한 훈련, 교육 및 기술을 요하며, (ii) 재정적 혜택이 문제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성 판단에는 당사자 간 관계의 '재정적 구조'(도구의 소유, 보수지급 등)를 '사용자의 통제'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iii) 보험판매인의 지위에 관한 명시적 합의의 존재가 중시되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암 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분쟁사례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4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에 따라, 어떤 종양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악성 종양(암)으로 분류되었는데 실제로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약관 문언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KCD 개정으로 암의 범위가 확대되면 암으로 추가 보장하고, KCD 개정에 따라 암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여전히 보험계약 체결 시의 기준에 따라 암으로 보장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암보험의 본질·취지를 고려하면 진단 시점의 기준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약관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6호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증가로 규제 범위 명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EU는 보험상품판매지침(2018년 시행)상 '보험 판매'의 정의규정에 온라인 보험판매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보험 판매'는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웹사이트 등 매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고객이 선택한 범주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계약의 가격 등을 비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계약 체결에 대한 추가적 조력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보험판매인에 대한 가망 고객 정보 제공 내지 가망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 정보 제공)은 제외된다.

KIRI 보험법리부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에 대한 약관 해석 및 개선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부(이슈 분석) 제6호

휴일재해사망·휴일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에서,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들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보험회사들의 개별 약관을 개선할 것을 안내하였다. 즉, 재해·상해 사고가 휴일에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해·상해 사고가 평일에 발생하고 이로 인해 휴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부(이슈 분석) 제7호

아직 시행 전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 관련 사항으로, (i)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책임 관련 내용, (ii) 분쟁조정 기구 확대, (iii)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 공개도 다시 발의되었다. 보험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보완 요구에 대해 보험업 특성에 따른 실질적 소비자 보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험업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부(이슈 분석) 제7호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 사항이나,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재식별에 대한 우려가 가명정보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질병·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관련 규제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로 가명정보 활용을 미루거나 억제하는 것은 데이터3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가명처리된 민감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준수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부(이슈 분석) 제8호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교안내를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에 해야 하는지 기존 보험계약 소멸 시에 하면 되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다. 현행 법 문언상으로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에 비교안내를 하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에 비교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제재를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령화와 주요국의 인구정책

강성호(연구위원)

제2020-1호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장수화와 저출산이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소득감소, 유병기간 증가,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주요국은 인구정책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해 왔으며, 사회문화 및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사협력, 20~30년에 걸친 장기적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김석영(선임연구위원)

제2020-2호

암 발생은 개인 및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 증가와 소득 상실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 민간 암보험은 2018년 약 6조 원의 암 보험금을 지급하여 암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에 따른 암 발생률과 암보험금 지급기준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안정적 상품 운영을 위해 비갱신형뿐만 아니라 갱신형 또는 요율변동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갱신 시 예경위험률 조정과 함께 약관조정 권한 부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노건엽(연구위원)

제2020-3호

일본 보험산업은 1980년대 외형 확대 경쟁 이후 버블 붕괴 및 저금리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여러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품 구조조정,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비차익 및 사차익 극대화 등을 통해 저금리에 대응하였다. 보유계약을 전환하거나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신계약을 증가시키고 자산은 대출 및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등 ALM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또한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 확보,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이차역마진 금액을 감소시켰다.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위원)

제2020-4호

일본 상위 6개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조사 결과 13개 국가에 총 50개 이상의 금융·보험회사에 투자하고 있고, 이 중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소유·출자한 보험회사 수는 약 33개사로 나타났다. 일본은 해외사업의 수입과 이익 성장이 국내보다 빠른데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해외 수입 비중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진출 특징은 해외시장 다변화, 대형사 중심에서 중견사로 확산, 합작투자와 회사 인수 전략 추진, 호주 및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과감한 투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사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장 다변화와 효과적인 현지화 전략 추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이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김세중(연구위원)

제2020-5호

2019년 말 회복 조짐을 보이던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하게 둔화되었다. 이에 각국은 유례없는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빠른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험산업 경영환경도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둔화, 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가계경제의 위축이 하반기에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0년 수입보험료를 전망하였다.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유형(1)

백영화(연구위원)

제2020-6호

암보험과 관련하여 과거에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했는지, 해당 분쟁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암보험 상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분쟁 사례들을 토대로 암보험 상품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예로 들어보면, 암의 진단 확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한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의 진단이 우선한다는 점, 암으로 진단 확정 받은 시점이나 진단 확정된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암보험에서는 90일의 부담보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유형(2)

백영화(연구위원)

제2020-7호

암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암보험 약관상의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들이 있었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들도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된 경우에 원발암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전이·재발암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암의 분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어떠한 종양이 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들도 있다.

보험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강성호(연구위원)

제2020-8호

보험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T·교통·통신, 의료·보건 등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보험산업의 특징 중 산업 간 강한 연계성과 관련되며, 이러한 특징은 타 산업의 일자리를 유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보험산업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슈어테크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등 보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장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제도 간소화의 필요성

조용운(연구위원)

제2020-9호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청구 절차의 전산화가 미흡하여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키오스크나 앱을 통해 청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보험중계센터 신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 활용은 청구간소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지, 보험회사 전산망과 연결된 보험중계센터와 요양기관 전산망과 연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모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 규제 변화(1)

양승현(연구위원)

제2020-1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개별 금융법에 산재된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들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하에 통합하고,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리 및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 및 보상처리 등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주요 규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 규제 변화(2)

양승현(연구위원)

제2020-11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정보 제공 및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외에도 불완전판매나 원치 않는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도입·변경되는 규제를 이해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험회사의 법규 준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후위기와 보험산업의 리스크(1)

이승준(연구위원)

제2020-12호

날로 잦아지는 이상기온과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이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정책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을 통한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 UN과 G20 등 국제기구와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을 포함하여 정책당국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산업인 보험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은 리스크를 시장에 기반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하는 산업이므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후위기와 보험산업의 리스크(2)

이승준(연구위원)

제2020-13호

기후 리스크는 크게 자연재해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와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리스크,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의 법적책임 문제와 관련된 배상책임 리스크로 나눌 수 있다. 기후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측면에서 영향을 주며, 보험인수 측면의 영향은 보험종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자산운용 측면의 영향은 정책대응 과정에서 기업가치의 변화와 관련된다.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은 경영 전반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고 리스크관리에 특화된 보험산업의 특성을 살려 기후위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II

2020년 대외활동

- Chapter 01 정책·경영세미나
- Chapter 02 산학세미나
- Chapter 03 포럼
-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Chapter 01

정책·경영세미나

- 금융소비자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
- 데이터 3법과 보험산업 - 보험정책 섹션 -
-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의 변화 -
- 팬데믹 시대 보험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
-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
- 보험산업 경쟁력 혁신 방안 -
- 파라메트릭 보험의 상품화 방안 -
-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
-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행사명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강화』 춘계심포지엄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FP학회·한국금융소비자학회·금융감독원 공동주최)

행사 개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전적 소비자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또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자문업 육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전문인력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금융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에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 일시 : 2020. 6. 25(목) 13:30~16:30
- 장소 : 금융감독원 연수원 (대강당, 1F)
- 주제 : 금융소비자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FP학회 회장)
 - 축 사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환영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 표 :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박사),
김도성 (서강대학교 교수), 김민정 (충북대학교 교수),
홍장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
 - 패널토론
 - 좌장 :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박광수 (동일대학교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문양수 (금융감독원 변호사)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의 부문별 규제방식으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금융법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종착점이 아닌 제도개선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효과와 판매 채널, 금융전문인력 측면에서의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데이터 3법과 보험산업

- 보험정책 섹션

행사명 『데이터 3법과 보험산업』 하계연합학술대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보험학회·리스크 관리학회·보험법학회·연금학회·한국계리사회 공동주최)

행사 개요

2020년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정책 과제, 저금리 대응방안, 예금보험제도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 일시 : 2020. 8. 28(금) 9:00~10:30
- 장소 : 온라인 세미나
- 발표
 - 사 회 :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
 - 발 표
 - 제1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정책 과제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해외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방안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제1주제) 코로나19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보험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위험요인은 크게 재무건전성과 보험영업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기회요인은 위험인식 제고, 디지털화의 가속화, 사업구조조정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정책과제로는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금융안정성 제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 개선, 인슈어테크 활성화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제2주제) 2000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어 제로금리수준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보험산업,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이차 역마진이 지속되었고 수익구조는 취약해졌다. 국내와 보험환경이 유사한 일본과 대만의 저금리 대응방안을 상품, 자산운용, 재무건전성 등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제3주제) 모든 금융권역의 소비자를 예금자 등으로 묶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려는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는 특히 보험계약자와 금융투자자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향후 각 금융회사의 사업모형과 이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리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의 변화

행사명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의 변화』 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동주최)

행사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
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과 채널,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사업 모델을 통해 소비자
경험과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산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일시 : 2020. 9. 8(수) 14:0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보험연구원 YouTube 채널 중계)
- 주제 :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전망
- 발표 및 토론
 - 개 회 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 사 : 김병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 기조연설 :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 발 표 :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양경희 (보험개발원 팀장),
임성기 (카카오페이 실장), 류준우 (보맵 대표), 김세호 (KPMG 상무),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
 - 토론 :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윤순태 (하나생명 전무),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주요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언택트 시대 진입이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의
각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보험 가치사슬 전반에서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언택트 전환과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다양한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
키고 소비자보호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시대 보험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행사명 『팬데믹 시대 보험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13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행사 개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험산업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고 있다. 팬데믹이 보험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진단하고 향후 보험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일시 : 2020. 10. 15(목) 09:00~13:00
- 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1F)(파이낸셜뉴스 YouTube 채널 중계)
- 주제 : 팬데믹 시대 보험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 발표 및 토론
 - 개 막 사 : 전재호 (파이낸셜 뉴스 회장)
 - 환 영 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 사 :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 기조강연 : 팬데믹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사의 경영전략
(Dr. Helmut Grundl, Goethe University Frankfurt, Germany)
 - 강 연 : 1. 팬데믹 시대, 글로벌 보험사의 대응전략
(오준석, BNP 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
2. 팬데믹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금융당국의 보험감독 방향
(강한구, 보험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패널토론
 - 좌 장 : 장동한 (한국보험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교수)
 - 패 널 : 오준석 (BNP 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한구 (보험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주요 내용

현재 경기둔화, 초저금리 정책,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성장성·수익성·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국내 보험산업은 코로나19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험회사에 보험영업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영업과 지급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전략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보험업계가 제공하고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나 정부의 재해연계 채권 발행은 팬데믹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의 개념은 단순히 판매되는 보험상품으로 인한 혜택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기업의 통합 위험관리에서 중요한 수단이므로 팬데믹 하에서 보험회사들은 통합 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보험사의 인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은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이 가져온 삶의 패러다임과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도 사업 간 상생구조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을 재정의 하는 과정을 거쳐 각자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팬데믹 위기에서 새로운 보험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조직철학의 재정비를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의 판매채널 다양화와 제도 유연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는 여전하다. 2021년 보험산업(퇴직연금 제외)은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 등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가 전망된다.

- 일시 : 2020. 10. 16(금) 10:00~11: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보험연구원 YouTube 채널 중계)
- 주제 :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 표 :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경기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저금리 심화, 유동성 급증 등 다양한 경제환경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앞으로의 경제성장 경로를 예측하는 데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는 여전하다. 2021년 보험산업(퇴직연금 제외)은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 등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가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보험산업의 고성장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은 2020년 2.5%에서 2021년 -0.4%로 역성장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2020년 6.1%에서 2021년 4.0%로 성장성 둔화가 전망된다. 보험산업은 코로나 경제와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보장과 고령사회의

건강과 소득 보장 공급자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과 공정경쟁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고 선제적 위험관리를 유도하며 이해관계자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행사명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 주관행사

행사 개요

현재 포괄 보장 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운영하고,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자기부담금 상향 및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추진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재가입주기를 현재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 일시 : 2020. 10. 27(화) 15:00~17:30
- 장소 : 프론트원 이벤트실(보험연구원 YouTube 채널 중계)
- 주제 :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 사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발 표 :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이면상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주요 내용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건강보장의 사적 사회안전망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한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과 연계한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운영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기부담금 상향과 의료환경 변화 및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재가입주기 단축 검토를 제안하였다.



보험산업 경쟁력 혁신 방안

행사명 『보험산업 경쟁력 혁신 방안』 CEO 및 경영인 세미나
주관행사

행사 개요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사업재 조정과 경쟁·협력모델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근본적 경쟁력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민·관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 일시 : 2020. 11. 4(수) 07:30~09:00
- 장소 :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별관 LL층)
- 주제 : 보험산업 경쟁력 혁신 방안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 표 :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형곤 (보스틴컨설팅그룹 매니징디렉터파트너),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요 내용

현재 보험산업은 탈성장 사회로 진입하여 과거와 같은 사업모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모형을 조정하고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ESG경영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흐름은 보험회사의 비재무적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의 기존 전략과 사업 전개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파라메트릭 보험의 상품화 방안

행사명 『파라메트릭 보험의 상품화 방안』 E-Conference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주최)

행사 개요

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파라메트릭 보험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해외 보험회사는 파라메트릭 보험의 개발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나라도 파라메트릭 보험의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파라메트릭 보험의 상품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 : 2020. 11. 11(수) 09:30~11:10
- 장소 : 줌(Zoom)을 통한 화상세미나
- 주제 : 파라메트릭 보험의 상품화 방안
- 발표 및 토론
 - 발 표 : 권옥진 (St. John's University 교수)
 - 패널토론
 - 사회 : 허 연 (중앙대학교 교수)
 - 토론 : 남상욱 (서원대학교 교수)
 - 조재훈 (영남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파라메트릭 보험의 상품화 방안에 대해 비대면 화상세미나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파라메트릭 보험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해외 보험회사는 이미 맞춤형 파라메트릭 보험을 개발하여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파라메트릭 보험은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손해 규모를 측정하기 힘들었던 리스크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의 경계를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행사명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보험산업이 시장 요구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1.9배의 이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현재의 낮은 이익을 '순자산가치', '보유계약가치', '신계약가치'로 구분하여 분석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 확대와 위험보장 다양화, 헬스케어서비스 도입 등 보험 사업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안정성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체투자의 다양한 분야를 제시하였다.

- 일시 : 2020. 11. 16(월) 14:00~16:5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보험연구원 YouTube 채널 중계)
- 주제 :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기조발표 : 고승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발표 :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 김형윤 (KB자산운용 인프라운용본부장)
 - 패널토론
 - 좌장 :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고인철 (DB손해보험 상무, CRO),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지원실장), 임창원 (숭실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기조연설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설명한 후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방침을 밝히고 향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 중요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이후 시장 요구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1.9배의 이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현재의 낮은 이익을 '순자산가치', '보유계약가치', '신계약가치'로 구분하여 분석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을 확대하고 위험보장 다양화, 헬스케어서비스 도입 등 제로금리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업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체투자는 안정성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부동산, 인프라, 기업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었다.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행사명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
공동주관행사(국회의원 김병욱·국회의원 김윤덕·국회의원 신영대·국회의원 이정문·
녹색소비자연대국협의회·한국자동차부품협회 공동주최, 보험연구원 주관)

행사 개요

품질인증 부품 활성화를 위한 수요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사고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홍보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 일시 : 2020. 12. 4(금) 13:00~14:55
- 장소 : 이에스인포매틱스 502세미나룸(여의도 백상빌딩 5층)
- 주제 :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발표 및 토론
 - 축 사 : 김병욱 (국회의원, 정부위원회 간사), 이정문 (국회의원, 정부위원회)
 - 발 표 : 윤영한 (한국기술대학교 교수),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부장)
 - 패널토론
 - 좌장 :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토론 : 김남주 (참여연대 변호사), 김기훈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사업위원장), 이정권 (창원금속 본부장),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이상 토론 순

주요 내용

정책당국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부품 민간자율인증제 도입,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도입, 홍보강화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품질인증부품이 사용된 건수가 11건, 총 금액은 약 5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질인증부품이 주로 사용되는

자동차보험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수요확대를 위해서 대물배상사고 수리에 실손보상원칙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되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음 하도록 하고, 품질인증부품 사용 보험료 할인특약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Chapter 02

산학세미나

- 보험회사 CEO 보수체계 -
- 코로나19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대응 -
- POST-코로나 시대, 보험소비자 보호 -
- 공동재보험 및 보험증권화를 통한 신제도 정착률 방안 -
-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
- 정보유출위험 가능최대손실 추정 -
- 보험회사 주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
- 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 -
- 금융기관의 기업위험관리와 임원보상 -
- 신용생명보험 발전방안 -

보험회사 CEO 보수체계

행사명 : 제3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1. 10(금) 11:30~13: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CEO Inside Debt and Risk Taking: Evidence from Property-Liability Insurance Firms
- 발표 : 심증보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교수)

주요 내용

미국 손해보험회사를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내부부채(CEO Inside Debt)와 위험감수성(Risk Taking)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임원보상과 같은 내부부채의 구조가 경영자의 위험감수 동기를 줄이는 잠재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대응

행사명 : 제4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4. 24(금) 11:00~12:00, ZOOM 화상 회의
- 주제 : 코로나19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대응
- 발표 :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도입될 K-ICS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 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POST-코로나 시대, 보험소비자 보호

행사명 : 제5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5. 29(금) 15:00~16:5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험소비자 보호
- 발표 :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요 내용

복잡해져 가는 금융환경과 판매채널의 변화 속에서 보험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금소법』이라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보험소비자 보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POST-코로나 시대에 맞는 보험소비자 보호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공동재보험 및 보험증권화를 통한 신제도 연착륙 방안

행사명 : 제6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6. 26(금) 11:30~13:5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공동재보험 및 보험증권화를 통한 신제도 연착륙 방안
- 발표 : 문성훈 (코리안리 금융재보험추진단 과장)

주요 내용

공동재보험은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을 헤지하는 수단으로써 장래손익변동성을 감소시켜 보험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할 수 있어 자본관리측면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자본공급출처 제한 등으로 근본적인 조달비용경감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제도도입비용 최적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행사명 : 제7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7. 17(금) 11:30~13: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 발표 :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1990년대 금융 환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모든 금융권역의 소비자들을 “예금자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통합기금을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보험업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보유출위험 가능최대손실 추정

행사명 : 제8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8. 21(금) 16:00~17: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Extreme data breach losse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stimating probable maximum loss for data breach risk
- 발표 : 정광민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주요 내용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피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보유출위험(data breach risk)의 가능최대손실(probable maximum loss)을 추정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보유출위험을 재보험과 공사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회사 주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행사명 : 제9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9. 25(금) 11:30~13: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험회사 주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 발표 : 이병건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주요 내용

근래 보험회사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 주가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현재의 주가가 보험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향후 상승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

행사명 : 제10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10. 30(금) 11:30~13: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
- 발표 : 임성기 (카카오페이 실장)

주요 내용

디지털화는 사회 변화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보험에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 플랫폼의 등장은 보험산업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디지털보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보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기관의 기업위험관리와 임원보상

행사명 : 제11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11. 27(금) 11:30~13: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The Effects of Executive Compensation on Corporate Risk Management
- 발표 : 윤지연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교수)

주요 내용

금융기관의 기업위험관리에 임원보상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임원보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2006년 FAS 123R을 도입한 이후 임원보상의 볼록성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의 기업은 주로 보험 수요 증가를 통해 위험관리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용생명보험 발전방안

행사명 : 제12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12. 18(금) 16:00~17:1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신용생명보험 발전방안
- 발표 :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택은 대부분 가계에서 가장 큰 자산으로 신용생명보험은 가장 중요한 자산을 보호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신용생명보험 시장규모는 협소하지만 잠재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동 상품의 효용성에 대한 정부 및 가계의 인식 제고와 국내 금융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및 감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Chapter 03

포럼

-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현황과 과제 -
-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
- 노후준비는 절약보다 전략이다. -
-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및 암보험 분쟁사례 -
- 온라인 광고와 모집에 관한 소고 -
- 부당승환금지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제언 -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현황과 과제

행사명 : 제30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7. 21(화) 16:00~17: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
노중필 (교보생명 팀장), 이승용 (라이나생명 이사)

주요 내용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리스크를 소개하고, 향후 상품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행사명 : 제31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12. 1(화) 13:00~14:00, e-conference로 진행
- 주제 :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 발표 : 방병호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
- 토론 : 권순일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장),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국내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입법 완료 및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후준비는 절약보다 전략이다.

행사명 : 2020년 제1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11. 20(금) 15:00~16: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노후준비는 절약보다 전략이다.
 -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알아두면 큰 도움 되는 노후준비 상식 -
- 발표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주요 내용

퇴직 과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야 할 노후준비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청중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적 관심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보험법포럼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및 암보험 분쟁사례

행사명 : 제2회 보험법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2. 11(화) 16:00~18: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및 발표 :
 -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민간 암보험 상품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생하였던 분쟁사례들을 소개 및 분석하였다.

온라인 광고와 모집에 관한 소고

행사명 : 제3회 보험법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5. 27(수) 16:00~17: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온라인 광고와 모집에 관한 소고
- 발표 : 오창영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주요 내용

온라인 광고와 모집 간의 불명확성과 관련된 사례와 쟁점들을 소개하고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모집 규제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부당승환금지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제언

행사명 : 제4회 보험법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11. 5(목) 16:00~17: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부당승환금지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제언
- 발표 : 이재현 (라이나생명 변호사)

주요 내용

보험업법상 부당승환금지 규제와 관련한 최근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 작업반/회의 참여 -
-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
-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연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간되며,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한상용 연구위원이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20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1호 (2020년 2월)

제목	저자
Understanding the Effect of Unanticipated Future Monetary Policy Shocks	Joonyoung Hu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품차별화된 시장의 R&D 리스크 선택	이상호, 조수미
금융·거시경제변수들의 한국 주식수익률 예측가능성 검정 - 표본 내 검정과 표본 외 검정결과 비교를 중심으로 -	전성주
Stock Return, Volume and Volatility in the EGARCH Model	Yi Jiang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2호 (2020년 5월)

제목	저자
법인소유저축은행의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여신집중에 미치는 영향: 피저축은행 근무경험을 중심으로	하성수, 김학건
주택수요 감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대출형태 변동을 중심으로	임태준
Time-of-Day Pattern and Long Memory Volatility in High Frequency Foreign Exchange Rates across Trading Time Zones	Youngwook Han
주관적 기대수명에 따른 성별 개인연금 수요 분석	이창선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3호 (2020년 8월)

제목	저자
‘보험금융연구’ 30년 연구 동향 리뷰: 제100호 출간을 기념하며	이봉주, 서대교, 황진태
신탁방식 주택연금 확대를 위한 정책적 연구	최경진, 전희주
미국 손해 보험회사의 상품다각화가 파생상품 활용에 미치는 영향	송인정, 홍충안
변액연금보험 가입 결정요인 분석	이경희, 최장훈
자동차보험 부상 합의금 지급 사례 분석: 경미사고를 중심으로	전용식
최적포트폴리오의 개선: 새로운 상관행렬 개선방법	엄철준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4호 (2020년 11월)

제목	저자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에 대한 연구: 엘리엇 사례를 중심으로	양철원
Determinants of the Reinsurance Decisions of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Hyunjee Park, Wook Sohn
보험투자자의 투자전략 분석	우민철
Hedging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US Property-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Sangyong Han

2. 작업반/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 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작업반을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각종 작업반/회의

작업반·회의 명	주최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작업반	금융위원회
연금 활성화 작업반	금융위원회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금융위원회
재보험 선진화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상품설명서 개선	금융위원회
보험사기 작업반	금융위원회
보험권 디지털·포스트코로나 금융협의회	금융위원회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작업반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추진 작업반	금융위원회, 환경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작업반	금융위원회
반사이익 산출, 활용 방안 작업반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원화국채 역대 담보화 도입방안 TF	기획재정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서비스 일자리창출 TF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방안 마련 TF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의료기기 피해보상제도 도입 TF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동차보험 자유화제도 보완방안 회의	손해보험업계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TF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TF	손해보험협회

3.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업권 리스크평가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포럼, 패널, 자문 등에 참여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정책(감독)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분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험업권 리스크평가 전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보험조사협의회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	보건복지부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보험자문위원회	금융감독원
채권정리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타 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건설공제
위험관리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녹색금융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한국생산기술원

포럼/패널/자문

포럼·패널·자문 명	주최
퇴직연금포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연구원
올드 이노베이션 포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자율주행자동차 미래포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12기 KDI 경제전문가 패널	KDI
리스크자문단	한국주택금융공사

4.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각종 금융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된 사례가 대다수이다.

III

2021년
주요 연구계획

1

사업재조정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김규동(연구위원) | 보고서

저금리,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상품 판매를 통한 위험보장 위주 사업에서 탈피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은 상품 포트폴리오만을 조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위험보장 위주의 사업에 머물러 있다. 이에 금융환경 변화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른 미국, 유럽, 일본 주요 보험회사의 사업 재조정 사례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계약이전 인프라 Run-off 시장 조사 - 독일 사례

위탁과제 | 보고서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 K-ICS 도입 등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재조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사업 철수 분야의 잔존 계약인 런오프 계약에 대한 효율적 처리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런오프 계약을 관리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계약이전이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시장 기반이 미흡한 편이다. 독일 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위기대응력 강화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노건엽(연구위원) | 보고서

K-ICS 도입으로 원칙론적 책임준비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간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관계를 정립하고 시가평가에 따른 계리제도 이슈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해외 주요국의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관계를 검토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한다.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황인창(연구위원) | 보고서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회사 수익성 하락 및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고, 향후 관련 규제 변화로 인해 보험산업 저금리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금리역마진이 심화되고, 듀레이션갭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다. 이에 보험산업의 저금리 환경 취약성을 파악하고 보험회사 부실화 및 금융안정성 저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독수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과 운영위험 관리

위탁과제 |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환경하에서 기존 위험관리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 부실, 디지털 시스템 불안정,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디지털 운영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 연구와 정량적 접근방식에 의한 내부 위험관리모형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이승준(연구위원) | 보고서

2015년 파리협정 체결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보험 및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통한 보험회사의 기후위기 대응은 경영전략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여 지속가능성을 지원한다.

3

위험선별/인수능력 강화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상품 대응방안

노건업(연구위원) | 보고서

저성장·저금리 심화로 인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해외 보험산업, 특히 저금리가 심화된 유럽, 일본의 상품 개발 사례와 제도를 파악하고, 현행 법규 및 감독제도에서 상품 개발 시 이슈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재보험산업 발전 정책방향

임준(연구위원) | 보고서

국내 보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재보험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재보험산업의 위험인수역량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재보험업의 위험인수역량 제고 방안으로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학 분야의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관련 이론 및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재보험산업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일 개인연금 현황과 시사점

장철(연구위원) | 보고서

고령화 심화로 개인연금(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판매는 위축되고 있다. 이는 경제환경 및 제도의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 및 판매채널의 공급유인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변화한 환경, 제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공급을 위해 해외 보험상품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위험선별/인수능력 강화

자동차보험 국제 비교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국내 자동차보험은 경쟁적인 시장 환경, 비탄력적인 요율조정 관행, 비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의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 대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성적인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자동차보험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Mobility as a Service와 보험제도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새로운 Mobility와 공유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MaaS(Mobility as a Service)가 태동, 확대되고 있다. MaaS에 활용되는 각종 새로운 Mobility가 기존 제도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률 증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통한 새로운 운송시스템 정착을 위해 보험제도 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판매채널 선진화

디지털 전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연구

김동겸(연구위원) | 보고서

국내 보험산업은 전속채널 중심의 대면방식에서 아웃소싱채널을 활용한 영업방식으로 진화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 행태 및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보험회사의 새로운 영업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판매채널의 운영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판매채널의 진화 및 제도 변화, 채널별 특성분석, 신채널 등장이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성보험의 비대면채널 활용 방안 연구 - 호주 사례

최창희(연구위원) | 보고서

경제 성장 정체로 보험시장 확대가 시급해진 상황에서 호주 기업성보험의 온라인 판매 성공 사례(최근 수년간 10% 내외 성장)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기업성보험 판매채널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동 연구는 호주 기업성보험 온라인 판매 성공 요인의 사례를 관련 보험회사, 시장 규모, 채널 운영 방법, 약관, 보험리스크 관리, 제도 등 다각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5

공·사 협력모형

건강보장체계에 대한 연구

정성희(연구위원) | 보고서

그동안 건강보장체계 관련 연구는 인구·의료·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균형적·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 현안 등에 따라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건강보장체계와 관련하여 수행되어 온 연구 성과를 주요 분야별로 진단 및 평가하고, 새로운 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건강보장체계 연구의 방향성 정립 및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재난보험시장 공·사 협력모형 연구

송윤아(연구위원) | 보고서

자연재난, 감염병,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 위협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수요가 커지고 있다. 거대손실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담보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는 동 위협에 대한 보험시장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난대비 정책도구로서 보험의 효용성과 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한상용(연구위원) | 보고서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확산은 기업의 휴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증가시키며 국내 기업들에게 기업휴지위험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와 정부 차원에서의 공·사 협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이 국내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회사 장기대체투자 현황과 과제

박희우(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는 자산·부채관리(ALM), 자산운용 수익률의 극대화,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등을 위해 장기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 인프라 투자처가 확대되며 장기투자자로서 보험회사의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므로 국내·외 보험회사의 장기대체투자 현황과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녹색 인프라 투자처 현황을 정리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6

소비자 신뢰 제고

보험소비자 행태 조사

변혜원(연구위원) | 보고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화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실효성 있는 보험소비자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적·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행태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 연구는 보험소비자 금융행태의 특성과 원인, 보험소비자 행태 변화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 설계와 효과 등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여 보험회사,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 행태 분석

손재희(연구위원) | 보고서

ICT 활용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거래와 소통 증가로 온라인 보험 구매가 확대되는 등 보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아직 디지털 보험소비 행태의 명확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보험 전 밸류체인의 변화를 반영한 보험소비 행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긍정 및 부정 경험 발생지점과 원인을 파악해 향후 정책 입안 및 전략 구축에 활용하고자 한다.

보험업 관련 주요 규제 체계 정리 -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양승현(연구위원) | 보고서

기존에 보험업법이 관장하던 보험업 관련 규제가 금융권역 통합법률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여러 법에 산재하게 됨에 따라 주요 규제 적용과 각 법률 간 관계 등에 관해 수법자인 보험회사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보험업 관련 주요 규제들에 적용되는 법률과 적용 관계 등을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법률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소비자 신뢰 제고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백영화(연구위원) | 보고서

부당 승환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서의 해석상 불명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해석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준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분쟁 발생 시 약관해석 기준에 대한 연구

황현아(연구위원) | 보고서

약관의 명확성 및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전적 분쟁 예방노력만으로 모든 분쟁을 막을 수는 없고, 분쟁 자체를 백안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약관해석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이와 함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관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2020년
일반현황

1. 경영비전

본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5대 안철경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보험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6년 4월	4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9년 4월	5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취임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3.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20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3개사, 손해보험회사 17개사가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턴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 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2020년에는 2020년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총 5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에는 2020년 2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19년부터는 연구자문위원회를 연구사업계획과 운영을 자문하는 ‘연구분과’와 보험산업 및 연구원 발전방향을 자문하는 ‘발전분과’로 나누어 구성하고 2020년 10월에 연구분과회의, 3월에 제1차 발전분과회의, 11월에 제2차 발전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자문위원회 연구분과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유호석	삼성생명 부사장
남덕우	한양대학교 교수	이근창	영남대학교 교수
성대규	신한생명(주) 사장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연구자문위원회 발전분과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	김지한	DRB동일(주) 상임감사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전무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이점마	경희대학교 교수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서태종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영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대표변호사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		

4. 임직원 현황

(2020. 12월 말 현재)

원장	연구직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임시직원	합계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1	30	21	4	10	2	7	75

2020 연차보고서

발 행 인 안철경
편집위원장 김해식
편 집 위 원 장동식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21. 1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20
연차보고서